

2010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Japan and Korea in Globalization and its Backlash:
Challenges and Prospects**

Yukiko Fukagawa

**An Overview of China:
Economic Prospects and Challenges**

Danny Leipziger



IGE 세계경제연구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후원

SAMSUNG

삼성전자

Yukiko Fukagawa

현 일본 Waseda대 교수.
Waseda대 졸, Yale대 석사, Waseda대 경제학 박사.

일본 무역진흥회(JETRO), 장은종합연구소 등을 거쳐 Aoyama대,
Tokyo대 교수 역임.

*“Korea-Japan FTA: Toward a Model Case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Japan-Korea Free Trade Agreement
Joint Study Group Report”, “Korean Economy in Transition”* 등
주요 논문 및 저서 다수.

Danny Leipziger

현 미국 George Washington대 교수, 전 세계은행 부총재.

오랫동안 세계은행에 재직하면서 동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고 특히 2004~2009년
동안 부총재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세계적 빈곤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음. 그리고 2009년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Michael Spence 교수와 공동으로 *“Globalization and Growth:
Implications for a Post-Crisis World”* 라는 역작을 출간한 바
있음.

*“Lessons from East Asia”, “Preventing Banking Crisis”,
“Korea: Transition to Maturity”* 등
주요 논문 및 저서 다수.

2010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Japan and Korea in Globalization and its Backlash:
Challenges and Prospects**

Yukiko Fukagawa

**An Overview of China:
Economic Prospects and Challenges**

Danny Leipziger



IGE 세계경제연구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후원

SAMSUNG

삼성전자

머리말

우리의 영원한 이웃인 중국과 일본은 과연 한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최근 중국경제는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일본경제는 지금까지 거의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는 한국의 대외교역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00~2009년 동안 한국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에서 21%로 증가하였고 순위도 3위에서 1위로 올라갔다. 이는 같은 기간에 미국의 비중이 약 21%(1위)에서 9%(3위)로 하락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 한편 일본은 이 기간 중 비록 2위의 순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비중은 약 16%에서 10%로 하락하였다. 과연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배경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장·단기 정책과제들은 무엇일까?

이 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0년도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에 특별히 초청된 두 분의 경제학자 강연내용을 그 질의·응답과 함께 정리한 것을 담고 있다. 하나는 지난 4월 8일 일본 와세다 대학의 Yukiko Fukagawa 교수가 “Japan and Korea in Globalization and its Backlash: Challenges and Prospects”란 제목으로 강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George Washington 대학의 Danny Leipziger 교수(전 세계은행 부총재)가 “An Overview of China: Economic Prospects and Challenges”란 제목으로 강연한 것이다.

두 강연자 모두 우리에게서 이미 너무나 친숙한 이름이라서 간략하

게 소개하면, 우선 Fukagawa 교수는 국내언론에 왕성한 기고활동을 통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일본인으로 한국경제 및 한국학을 전공한 몇 안 되는 학자 중에 하나이다. 그는 와세다 대학에 오기 전 1998~2006년 동안 Aoyama Gakuin 대학과 University of Tokyo에서 한국학을 강의하였을 뿐 아니라, 80년대 초에는 한국의 산업연구원에서 잠깐 근무한 바 있다. 한편 Leipziger 교수는 오랫동안 세계은행에 재직하면서 동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고, 특히 2004~2009년 부총재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세계적 빈곤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Michael Spence 교수와 공동으로 *Globalization and Growth: Implications for a Post-Crisis World* 라는 역작을 내놓았다.

독자들의 편의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강연자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Fukagawa 교수는 최근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상호 간에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먼저 세계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특징적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세계경제의 성장구조가 과거의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시장국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둘째는 신흥시장국들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그 패턴이나 전략에도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끝으로 세계는 FTA와 여타 통로를 통해서 상당한 수준의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화는 WTO가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환경문제를 다루는 회담(2009년 코펜하겐 회담)도 실패했고, 그리고 앞으로 G-20가 과연 G-8을 성공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등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음도 그는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기업들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들도 크게 바뀌어가고 있음을 그는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보화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의사결정속도가 매우 중요해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FDI를 통해서 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인재유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원, 즉 외부적 경영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가 중요하게 되었고, 그리고 끝으로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부/기업 간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는 최근 한국기업들이 일본 기업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이유를 기업의 대응 및 정부의 정책 측면에서 찾아보고 있다. 우선 기업 측면에서 그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의사결정의 속도에서 찾고 있다. 한 때는 국가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한국형 기업소유구조, 즉 분명한 주인이 있는 구조(또는 가족경영체제)가 지금은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반면에 방대한 관료주의적 조직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은 소위 *Baramaki*(조화를 강조하는 일종의 ‘선심공세’) 문화에 젖어 의사결정도 느리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세계화에 앞선 한국 기업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영자원을 확보하고 판매처를 확보하는데 역시 앞서 나간다는 것이다. 일본의 기업들은 소위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신드롬(Number 2 Economy Syndrome)”에 빠져 모든 것을 국내시장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정부의 역할 측면에서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 우월한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좀 더 능률적인 한국의 대통령제도에서 찾고 있다. 즉 원자력설비와 고속철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해외 판매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수시로 바뀌는 일본의 총리제도보다는 한국의 대통령제도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거시경제의 운용에 있어서도 일본은 한국에 뒤져 있다는 것이다.

국내외로 어려운 시기에 엔화가치는 상승하고 국내물가는 디플레이션을 거듭하고 있어 수출과 내수 모두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끝으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뒤져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것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의 금융시장이 세계자본시장에 비해 워낙 작기 때문에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의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성이 아직 일본에 비해 크게 낮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한국의 중소기업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두가 충분히 음미해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아시아 신흥국경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온 **Leipziger** 교수는 중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후 나름대로의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에 비추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성장전략에 관해서도 유익한 조언을 하고 있다. 그는 우선 최근 중국경제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8.7%(2009년)라는 양호한 성장률을 거두고 있을 뿐 아니라 놀랍게도 잠재성장률(인플레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성장률)에 거의 가까운 실질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감소하는 수출을 대체하기 위하여 정부투자를 신속하게 증대하는 등 재정정책의 활용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급팽창한 국내신용은 인플레 기대심리와 주택가격의 버블 가능성을 높였고, 특히 무리한 환율 고정으로 저평가된 위안화는 필요이상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낳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국내소비수준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있음을 그는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 비추어 그는 몇 가지 중기적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

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 없이 국내소비증대를 통해서 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간 인력이동 등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여 그 동안 크게 악화된 지역 간 소득격차를 해소해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공공투자의 효율성은 물론 경제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 등이다.

그는 또 장기적 정책과제도 기본적 분석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저조한 특허권 수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뒤쳐진 기술 혁신분야에 대한 개선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낙후된 서비스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들고 있다. 특히 서비스 부문 중 가장 낙후된 분야로 그는 교육, 의료 및 보건 분야를 꼽고 있다. 그 밖에 그는 80년대 이후 실시되어온 한 자녀와 같은 인구정책의 결과로 곧 불어 닥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여러 가지 복지후생정책을 도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최근 위기관리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취해온 재정부양책과 금융정책은 가장 모범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녹색성장정책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또 최근 잠식되어가고 있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우려하여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한국 정부가 한국근로자의 은퇴연령을 55세에서 62세로 높이고, 또 현재 매우 저조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이고, 그리고 현재 부진한 서비스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제조업 수준으로 높일 수만 있다면, 한국은 잠재성장률을 2% 포인트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탁월한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아무튼 이 보고서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삼성전자의 후원으로 빛

을 보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특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건희 회장님과 이윤우 부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0년 7월

세계경제연구원
원장 남 중 현

차 례

머리말	3
Japan and Korea in Globalization and its Backlash: Challenges and Prospects	11
세계화 파고 속의 한국과 일본경제: 도전과 전망 <i>Yukiko Fukagawa</i>	
번역문	41
An Overview of China: Economic Prospects and Challenges	69
중국 경제의 虛와 實: 과제와 전망 <i>Danny Leipziger</i>	
번역문	99

Japan and Korea in Globalization and its Backlash: Challenges and Prospects*

Yukiko Fukagawa

Today my topic will be the economic performance of Japan and Korea in globalization and the backlash against globalization in those nations. My basic conclusion is that Korea seems to be doing much better in handling the backlash due to various structural features. Now, there are small booms that have benchmarked Korea's performance. Historically, this is a very new kind of trend. In fact, at one point I wrote a piece for Korean newspapers saying that I am quite sure the time will come when Japan starts focusing on, and learning from, Korea's performance in the global system.

My outline will be as follows: I would like to point out three realities in globalization that are sometimes ignored due to emotional, political, and/or social reasons. One is that the growth structures have changed drastically. The second issue is that—because the global economy has undergone significant change—the patterns or the strategies of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seem to have changed a lot—especially for Japan and Korea—because we are the first generation of industrializing countries in Asia. We are based on GATT-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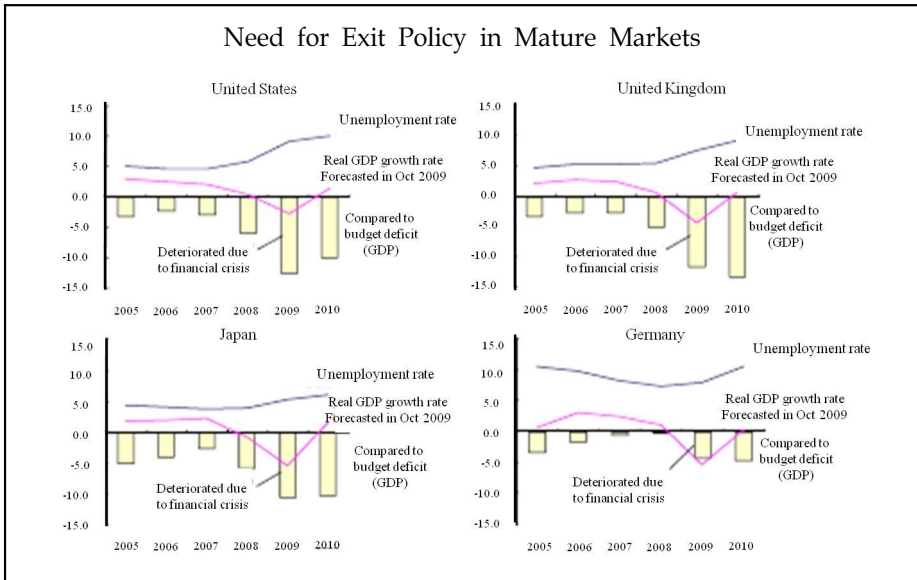
* Transcript of a speech given at the IGE/Samsung Electronics Global Business Forum on Thursday, April 8, 2010

foundations instead of the WTO. The third issue is the Korea-Japan FTA. It has never been successful, but the reality is that the Korean and Japanese markets are already merged in many respects. So the FTA talks are just to institutionalize and confirm that the two markets are integrated. These three realities are very different when compared to the time before the collapse of Lehman Brothers. Secondly,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impact of globalization's backlash in the context of comparing Japan and Korea. Finally, I will try to extract some implications from my logic on regionalism in a competitive framework.

In the post-crisis global economy many uncertainties remain in mature economies. At the moment, market sentiment is very optimistic – and naturally so – because many countries have been spending incredible amounts of money to boost their economies. But there are still discussions about how to exit from this situation with soft landings. This is especially true for Japan and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ir budgetary deficits are huge. Also, there is a European Union crisis stemming from Greece. Many people are now saying that the BRIC countries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are going to move the global economy forward. Yet, in closely examining their structures it is clear that they have fragile foundations and fragile national sectors. Swinging liquidity, a shortage of credit, or too much credit are difficult situations that those countries have to deal with. Again, closely related to exit issues, there are big issue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rebalancing their distorted and imbalanced structures. Also, the financial crisis appears to be somewhat contained at this time but the speed of adjustment by the

real economy –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 has been very slow. In that sense, there is still a lot of risk, especially due to the rise of protectionism. If the world solely depends on the big, energy-consuming emerging powers for the future sustainability of the global economy, there are clearly some resource sustainability issues on the global level. Even though the world is in the midst of historic changes, the systems that govern these changes are very uncertain. The WTO is very stagnant, COP15 – the Copenhagen climate change conference that took place in 2009 and dealt with environment issues – essentially failed, and whether the G-20 can replace the G-7 remains uncertain. We are all living in a world of uncertainty.

〈Figure 1〉



Looking at Figure 1, it shows the budgetary deficits of the Un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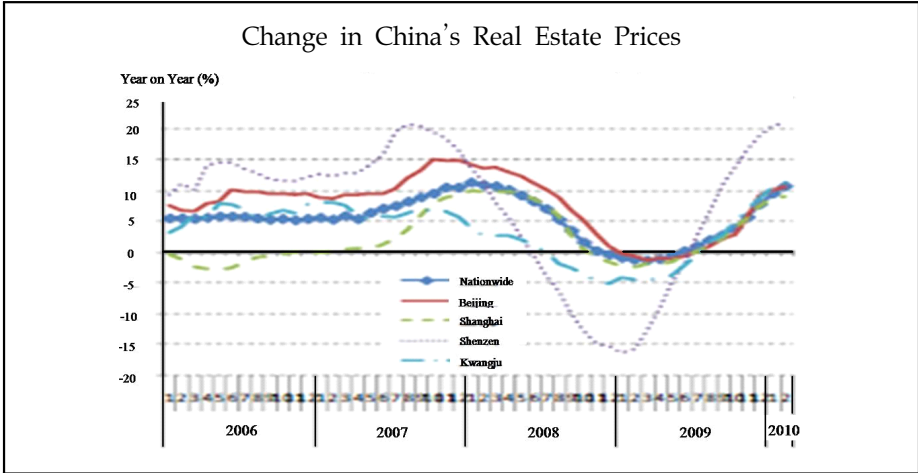
States, Japan, England, and Germany. The deficit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oth exceed 10 percent of GDP, which is very serious. England is even more severe. Germany is getting much better, but still all of the mature economies are suffering from huge budgetary deficits along with high unemployment rates.

Basically, the United States was the only country recording huge current account deficits while Asia was financing it. The capital flow from the United States to the Asia-Pacific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start of the present crisis. On the other hand, the flow of money from the Asia-Pacific to the United States has been decli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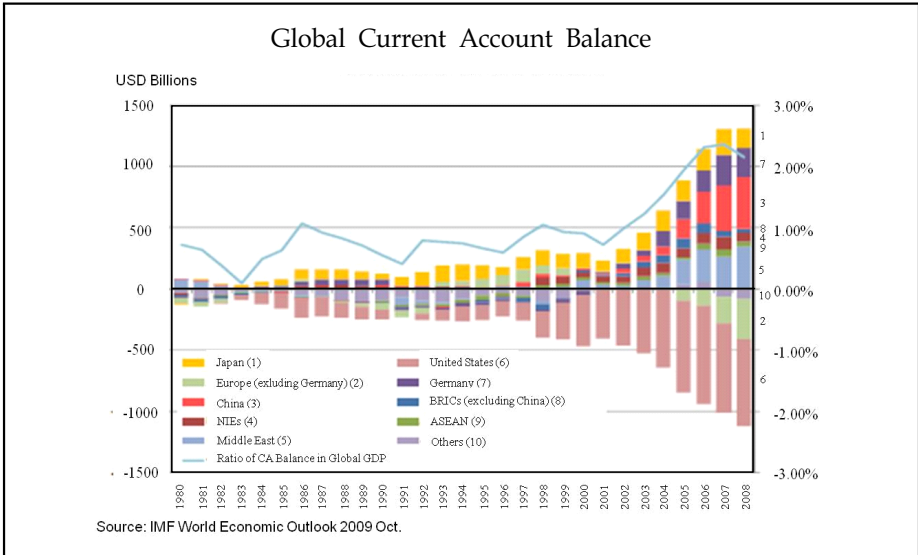
While China has been very strategic, Japan has been in a slightly different position. Even though Japan is worried about the future of the U.S. dollar, politically it cannot really move against it. The U.S. dollar continues to maintain the position of key currency and China still invests in the U.S. dollar. Because so much money is coming back to the Asian-Pacific—especially to the emerging markets—China has decided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Chinese yuan. Due to this, China has been suffering from too much liquidity and that has pushed up the property market, seen in Figure 2. In particular, Shenzhen—which neighbors Hong Kong—has been extremely volatile, as illustrated by the dotted line. Moreover, the fluctuations became very large following the international shock.

So we are in the process of correcting the global imbalances. However, Figure 3 shows that the United States is still recording a large deficit while the other countries are trying to finance it. China

<Figur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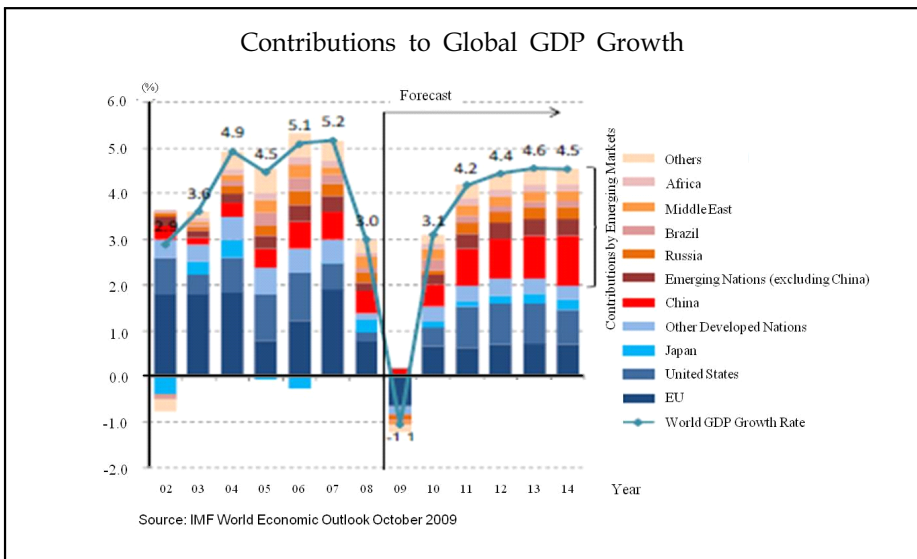
<Figure 3>



has been emerging quite rapidly to finance the U.S. debt. That is why the media likes the idea of G-2.

Mature economies have all of the problems. Growth is expected to rely heavily on emerging markets like 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Middle Eastern countries (see Figure 4). Before the crisis emerging markets only contributed about 30% of global economic growth. Now, more than 50% of growth is being driven by the relatively large emerging markets.

〈Figure 4〉



The growth structure of emerging markets is very important. This is a crucial factor when comparing the performances of Korea and Japan. I think many Japanese have already started to realize it, but the leading Korean firms—the big four or five—are responding quite well to the environment in emerging markets for various reasons.

The structures of big countries with large populations, like China

and India, share some similar characteristics. First, mass consumption in these countries is very different from Japan and Korea, which are very homogeneous. China and India are children of globalization, and market demands vary tremendously from old economies to new economies. New economies still need infrastructure and very simple consumer goods, but they also need very sophisticated services. They need everything from low-tech to high-tech products, as well as goods and services. Also, the way that these new economies sustain consistent incomes is very different from the way Korea and Japan sustained theirs in the past. They have greatly benefited from global fragmentation and the agglomeration of industries. From the Korean media, I sometimes feel that people still try to think about economies on a national basis, using comparative advantage and Heckscher-Ohlin-type ideas learned at university. The real structure of economies is now very different, so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having huge industrial agglomerations can be successful. Therefore, the very basic measurements – like GDPs for examples – are not as important because economies are now more region-based rather than nation-based. This means a lot.

Emerging markets are clearly not textbook cases. The market segmentations are very unique. First, the populations of these emerging markets are expanding. Demographically they are very young, especially in India and Brazil. The rapid rate of urbanization is another recent phenomenon of globalization. China is a good example of this. Its economy is very much dominated by big cities and surrounding economic blocks. People continue to move from rural areas to the cities. One of the positives of this is – because all of China’s service

functions are concentrated in the cities—the poor workers coming from rural areas earn more disposable income to spend on goods and services than if they were to live in more rural areas. Of course, if they are living in a city they benefit from the relatively sophisticated financial services which allow them to borrow. Also, their demand for goods is stimulated by sophisticated marketing and advertising.

Digitalization is another feature of globalization. I do not need to express this in detail because Korea, being an IT society, is well aware of its effects. Emerging market consumers have received a wide range of benefits from technology. Their information base is largely composed of the Internet and mobile phones instead of TVs as in the past. These consumers know quite a bit about fashionable products, and that is why they try to consume the most fashionable, most high-end products. Even those who cannot afford these products try to follow the trends.

So, the growth structures in emerging markets are quite different from when Japan and Korea were developing. Emerging markets are bringing many new consumers to the market, and these new consumers are very diverse—even within a single country—due to the tremendous variation in infrastructure, geography, family size, and lifestyle. Moreover, there is class segmentation due to the income gap, which is significantly larger than in years past. For marketing, understanding segmentation in the large emerging markets is quite important. Information is already globalized, making consumers more responsive to manufacturers via mobile phone, blogs, and social networking sites like Twitter. The economies are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ast. For example, economies of scale still apply because these new markets are large, but the scope is also very important. These new consumers are very demanding, so cost performance is a crucial factor to be successful in these emerging economies. Customer satisfac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IT-type consumers are incredibly responsive.

The reason I am stressing these differences is because Korean firms seem to be much better tailored to these consumers than Japanese firms. Korean firms are segmented and well-managed in terms of marketing, brand image, and customer satisfaction. I think Korean firms have, at times, benefited from the painful experiences of the so-called “IMF Crisis.” Firms must either satisfy the consumers or they must get out of the market. Korean firms learned this very basic principle while Japanese firms never faced this sort of painful experience. Japanese firms very much depend on the domestic market simply because the Japanese market used to be number two in the world, and that is their weakness. This is why they have not been able to catch up to the Korean firms in terms of acquiring market share in the emerging markets.

The second – and more fundamental – point is the fact that the industrialization model has been rapidly changing. While there is still some discussion about comparative advantage, and some nationalistic Korean media still criticizes the trade deficit with Japan, I believe these ideas are still bounded by a kind of nation-based framework. However, it is no longer the nations but the industrial networks across borders that will decide competitiveness. At times, the nation

as a whole does not mean a lot. If we look at the East Asian growth model we see many different features—especially in terms of their institutions. The first generation industrializers like Japan, Korea, and Taiwan are essentially based on nation-states and national economies. That is why local entrepreneurship has been emphasized. There has been heavy government intervention through so-called “industrial policy.” In technology, skill building is quite an important issue, and to support long-term skill building industrial capital—raised through the banking sector—was needed in the economies of East Asia.

The second generation of industrializers in the region came through ASEAN—countries like Malaysia and Thailand. These nations are not purely sticking to local entrepreneurship; they are also attempting to attract high levels of FDI. The local entrepreneurs, because they have local advantages such as political vested interests, can concentrate more on the resource-based businesses. And naturally, because they are quite dominated by the Chinese capitalists, the second generation’s capital tends to be more for trade and commercial capital.

Now, we have third generation countries like China, India, and Brazil. They are very different even from the second generation because the global economy has become very integrated. In this model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outward and inward FDI. In our times, developing countries usually tried to attract FDI while maturing their local enterprises. Then later, if competitively successful, the developing countries would open their local markets to other countries and then begin to invest abroad. Now we are seeing these third generation countries do both at the same time. Chinese firms are very active in

M&A activities because they have accumulated such a large foreign reserve, and at the same time the Chinese economy remains very much dependent on FDI. Recently, the Chinese government seems to be more interested in the industrial policies of the past. Officials are now saying things like, “Well, in the past we accepted so much FDI that much of our economy is now dependent on foreign multinationals. We now need to push up our local firms.” This is quite different from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Also, because things are quite globalized, and IT infrastructure is well-established, third generation countries are following a very different type of economic development. Finance is now very much globalized so they do not have to support their local entrepreneurship with domestic savings like the first generation had to. So, third generation industrialization is very different from the first and second.

The factors determining competitiveness have changed substantially. In the past everyone was told that developing countries should do X, Y, and Z so that they could prepare for sustainable growth. Now, it is most important to coordinate FDI and other outside managerial resources. The second change is the speed of decision-making. Speed is crucial in a globalized economy because people are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Also, management of a diverse workforce is critically important because there are so many talented people coming from different countries. Risk is always important and always there. If risk is mismanaged the effects greatly impact the emerging economies. Now, some new type of government/private sector relationship is needed to adapt to the global changes. That is why I say that new corporations in both Japan and Korea are very much needed.

Considering these factors, I would again say that Korea is performing better than Japan because Korea was forced to realize – due to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 that the global economy has undergone major changes. Also, the speed of decision-making is much faster in Korea than in Japan thanks to the Korean-style ownership of firms. The success of Samsung, for example, is widely recognized to be the result of Chairman Lee Kun-Hee’s leadership. When Korea was in the midst of the IMF Crisis, the Korean people heavily criticized the family business for ruining the national economy, but now Korea benefits from these structures. Japanese companies – split by ownership and management – will have a difficult time catching up in their current state. Taking responsibility for major decisions is also important. Japanese firms are very bureaucratic and no one is ever willing to take responsibility, leaving serious decisions up in the air. That is why Japanese firms react so slowly.

The second factor is the management of diversity. One of the big problems in Japan is what I call “Number 2 Economy” syndrome. When in Japan one never feels to be failing or lagging behind because the economy is huge. Unfortunately, Japan always records a current account surplus and the IMF has never had to intervene in the Japanese economy. So the Japanese do not realize that the world is diversifying without them. They need to adapt to the current situation of managing diversity, especially in terms of human capital.

It is very interesting that Korean firms, at times, have domestic problems with labor unions and the like, but are doing relatively well outside of Korea. Technically, this is partly due to the fact that

Korean managers speak English – and other languages – much better than Japanese managers. Also, Korean firms have accepted global diversity by scouting international talent from all over the world. In terms of human capital, I think that Samsung is far more globalized than the major Japanese firms like Sony and Toshiba.

I understand that much of the old style “Korea Inc.” remains in government, but still the way Korea Inc. has been doing business these days is far more sophisticated than before. Now, to sell a nuclear plant or a bullet train the government has to be dealt with. Of course, in this environment sales pitches by the politicians are very important. Also, the Korean presidential system has proven itself beneficial. President Lee – an experienced businessman – seems to be quite aggressive about these international deals. Japan cannot catch up in this regard either. So those are the major structural reasons for Japan lagging Korea in the global economy.

Although they share common foundations, the situations of the Japanese and Korean economies are very different. For Japan, the global crisis started with the real economy rather than the financial sector. Of course, Japan is still the largest capital exporter to the global economy because China is controlling its foreign exchange and capital export. The shock in Japan’s financial sector came after the Lehman Brothers bankruptcy and the deterioration of overseas assets. Japan, of course, invested in everything. Domestically, many Japanese were too optimistic because the issue of non-performing loans had already been solved. That is very different from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because so-called “lost 15 years” in Japan ended with

Koizumi. Japan seemed to be in good shape – especially in banking. So, many people thought that Japan would emerge much better than Europe or the United States. That is why the Japanese yen appreciated. It was almost the only relatively risk-free international currency.

However, Japan is suffering in the real sector because of the appreciation of the yen. Suffering in the real sector began with a rapid, historic fall in exports to mature markets. The response by leading Japanese firms to the appreciation of the yen – and to losing ground to Chinese and Korean firms – was to invest heavily in R&D and focus on high-end, technology-intensive sectors. Japanese managers thought that, because their firm's products were expensive,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would be the only potential markets. That is why the Japanese economy is so dependent on the bubble consumers in the United States. Toyota serves as a good example of this. It enormously accelerated its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it is the reason why Toyota responded so late to changes in the market.

Another place where Korea suffered little and Japan suffered immensely was in intermediate goods like machinery. In Korea's case, if demand for final goods rapidly decreases, it can adjust the inventory by cutting imports. Japan, on the other hand, is exporting both final goods to the mature market as well as providing intermediate goods to major Asian countries. In the crisis, both sides of exports were struggling in Japan. In other words, Japan was the final anchor in the shrinkage of global demand.

Another issue was the quick decrease in consumption in Japan.

The Japanese economy started to suffer from a deflationary spiral. Japan is very dependent on the domestic market, depending on exports only one-fourth as much as Korea. The domestic market continues to shrink and that, of course, will put pressure on the profits of Japanese firms. In terms of employment, major Japanese firms have been radically adjusting employment in a similar fashion to what happened in Korea during the IMF Crisis. That is another reason why domestic consumption has not picked up—people fear the possibility of becoming unemployed and worry about their retirement.

Lastly, there have been major changes in Japanese politics after 55 years. These changes can be likened to the crash of the Soviet Union. The current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government is very chaotic because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system was so entrenched. Japan is still probing for exits to get out of its current situation, but no one knows which direction to take.

Korea—from my observation—is almost destined to suffer from the roller coaster of financial crises. The crisis in Korea started with its currency, as many people worried about the expanded property investment in Korea, which is reported to be related to the sub-prime loans in the United States. Also, foreign banks and investors were present. Because global capital is huge relative to domestic financial assets, Korea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inflow and outflow of capital. In Korea, crises seem to come mainly from the financial sector and not the real sector. In Korea's real sector, energy efficiency is still much worse than in Japan. So, hikes in the prices of energy and resources always put pressure on Korea's economy. Also, Korea

initially suffered from falling exports, but it has recovered quite rapidly thanks to the swift response of large firms to the emerging markets. The dark side of this is that the large firms are doing fine, but the small firms remain in a fragile state. Thanks to the massive adjustments a decade ago, the impact on employment seems quite minor in Korea compared to Japan. Yet, the labor market in Korea has been quite stagnant. The market has been trying to become more flexible, but growth without employment has been a feature of the Korean economy since the first financial crisis. That is the main reason that the impact on employment seems minor. The government has always been desperate to aid the economy. This is especially true as Korea faces a rising government debt and an aging society, which will begin to place downward pressure on the Korean economy.

If we compare Japan and Korea in terms of global change, there is a crucial difference. Korea has committed itself to following the global economy while Japan is plagued with its Number 2 Economy syndrome. That i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never been very serious about FTAs and firms continue to stick to the domestic market.

Simply put, Japan is not ready for globalization. After the crisis began, the Japanese yen nominally appreciated and firms rushed into high value-added goods and hi-tech R&D. Korea was different with its depreciated currency and its export drive to emerging mark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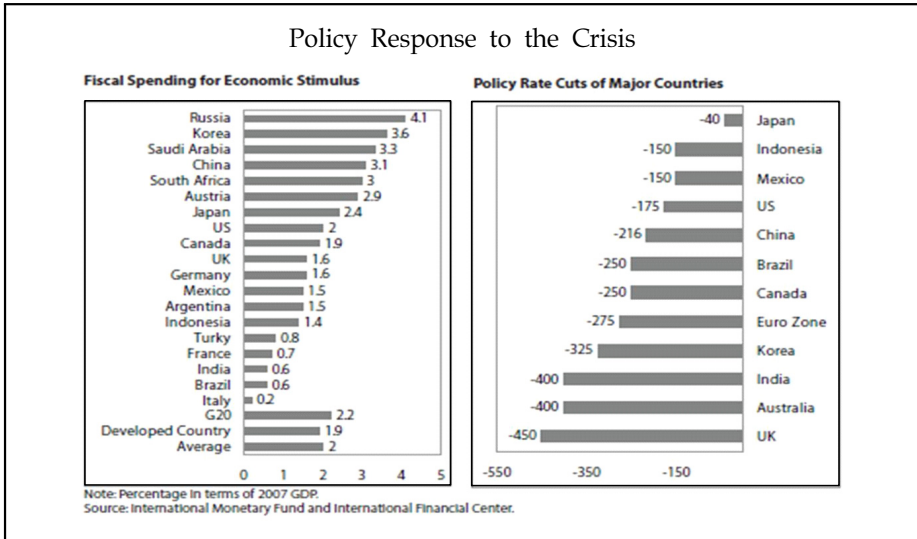
With regards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order, Japan has the largest amount of financial assets, but it is a follower in constructing the architecture of the financial system. Japan remains calm and

responsive. On the other hand, Korea seems to be much more aggressive. It is chairing the G-20 Summit in November, and it will be able to represent the voices of the smaller, open economies.

Japan has always been praised as being the most energy efficient and as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resource-saving productions. But sometimes the Japanese even criticize themselves about this. A good analogy of this is Yuna Kim and Mao Asada. Yuna Kim represents a globalized model. She was trained in Canada, and her performance fits into the newly established rules. That is why—by not taking too much risk—she could perform much better than Mao Asada. Mao Asada represents a very different character. A Russian coach trained her, and these days the Russian style has become out-dated. This is why Mao Asada is sticking to the triple axle, a technically difficult, very risky jump. Mao Asada and her coach still think that as an athlete she should perform the most difficult routine in order to get a gold medal. This is just like Japanese firms. They stick to technology to get an edge on their competition because most Japanese managers in technology firms are engineers. They are taking a huge risk by spending so much money on R&D. The Korean firm models are like Yuna Kim. They do not spend nearly as much on R&D. They wait to see if there is a huge market for a product and then if there is, they rush into the market and make huge profits. Korea has a market strategy with middle technology and that seems far more feasible than the strategies put forth by Japanese firms.

The rapid recovery of the Korean economy is very obviously supported by the massive spending of the government. Figure 5 shows

〈Figur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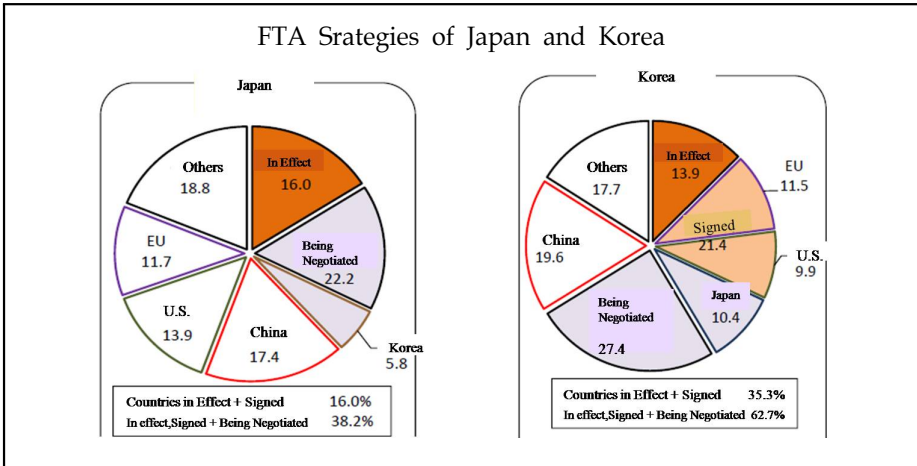
fiscal spending for economic stimulus packages.

Korea is second only to Russia in total fiscal spending for economic stimulus with 3.6% of GDP. Japan is far lower with around 2.4% of GDP. Also, when talking about interest rate cuts, Japan was the lowest because its interest rates were already around zero percent. Again, Korea was in a much better position because it was able to drop its interest rates during the crisis.

Japan still thinks of itself as a big power, which is a serious problem. Figure 6 compares the percentage of exports that are covered, or will be covered, by FTAs that have been signed, or are being negotiated, by the two nations.

As the graph shows, if Korea ratifies all of its pacts—including

〈Figure 6〉



one with Japan which is currently being negotiated— 62.7% of its exports will be covered by FTAs. I think that this is the right direction for Korea’s economy. Yet, Japan has been quite slow about negotiating FTAs and this is because of the domestic agricultural sector. This has been a major issue for the LDP and even for the new Democratic Party. With the ratification of Korea’s FTAs, Japan will not be able to catch up to Korea’s speed in agricultural liberalization. As I said, Korea is putting a lot of effort into catching up with the present third generation of industrializers while Japan stays with the model of the first generation. The illusion that high technology means power is common among policymakers. On the other hand, Korea still worries about its trade deficit with Japan. Many people still believe that Korea needs to catch up to Japan and solve the trade deficit. These ideas are wrong and outdated.

Korea’s leading firms have clear priorities with segmentation and

concentration in markets while Japanese firms do not have clear priorities. From the government to leading firms, no one can easily get out of this *Baramaki* situation. (Literally translated as “rose strewing”, *baramaki* is similar to pork-barreling, where the government spends heavily on public works to win votes.) It is difficult in Japan to cut out something or to concentrate on one thing. This is why the speed is very slow in Japan and the results are never clear. Korean firms benefit from their speedy decision making process, partially thanks to family-business structures.

〈Figur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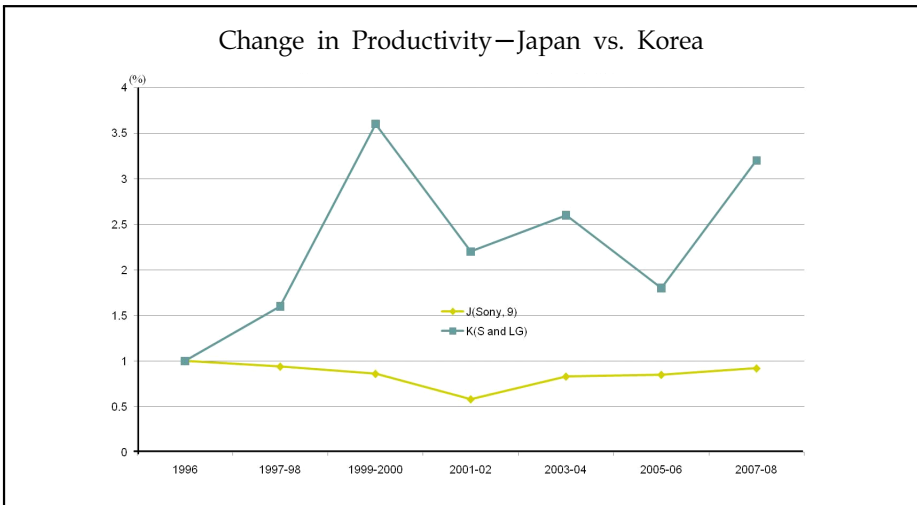


Figure 7 compares Japan and Korea in terms of productivity change. The upper line, marked with squares, represents Samsung and LG and the lower line, marked with diamonds, consists of Sony and nine other Japanese electronics firms.

As Figure 7 shows, Japan has been very flat, but Korea's productivity change has risen quite rapidly since 1996. Table 1 supports this, showing Korea's major products, and their market share, which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The global market shares in DRAM, mobile phones, automobiles, and TVs have all gone up tremendously since 2005.

〈Table 1〉
Global Market Share of Korea's Major Products

	(Unit: %)				
	2005	2006	2007	2008	2009
DRAM	47.3	44.8	49.0	49.6	61.0
Mobile Phone	19.4	18.1	20.7	24.5	30.6
Automobile	4.3	4.5	4.8	5.1	7.3
Shipbuilding	35.6	35.2	35.6	33.8	34.4
TV	19.6	24.3	28.2	33.7	36.1

Note: 1. Figures for 2009 are estimates by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 For Automobile, figures are market share for U.S. 2009 figures based on January through October

Source: Korea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and the Korea Shipbuilders' Association

Finally, I would like to add that the Japanese and Korean markets are already integrated in some sense. Even though Korean firms are outperforming Japanese firms, the macroeconomic structures between the two have not changed a lot. Still Japan is providing a lot of capital and intermediate goods to Korean exporters. Many people criticize it, but I think that is the reason why leading Korean firms have been able to gain huge profits – they do not invest in unproductive sectors. Japan cannot stop it because of the *Baramaki* and the emphasis on

having a harmonious society. When Korea's firms were performing significantly poorer than Japanese firms, Korea could claim that it had not yet caught up to Japan. But now, things have changed significantly. Japan is no longer dominating, and Korea is a strong competitor.

Since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ok office, Korea has become very vulnerable to the fluctuation of currencies. Countries have to take currency stabilization seriously, but it is not an easy challenge. In terms of employment, Japan and Korea need to make more of an effort in upgrading the service sector instead of the manufacturing sector because the manufacturing sector is already globalized. The service sector is the only sector that has room for improving productivity, which will, in turn, increase job employment in things like tourism, culture, education, finance, and logistics. In these service industries geography is important because Japan and Korea are eternal neighbors. Therefore, the movement of people is natural between the two.

To conclude, Korea outperforms Japan for several reasons. First, Korea is more competitive in emerging markets and in the globalization model. In some sense, Korea and Japan are in the middle of a seesaw game. Japan has scattered all of its precious managerial resources into R&D without prudent analysis. It is a big risk. Also, heavily investing in R&D, which does not directly help profits, puts more budgetary constraints on other departments like marketing.

Also, Japan is providing very talented people to the whole world—

and especially to Korea due to the similarity of the industrial structures of the two nations. I have noticed that Samsung has been greatly aided by hiring Japan's recently laid off workers.

Korea is the opposite. Product development is based on the customer. Also, Korean firms – with their intensive marketing and advertising in emerging markets – have been successful. Korean firms are sometimes very venturous about mass production and that can lead to profit gains, better patents, and better human resources.

Japanese small and medium-sized firms specializing in high quality intermediate goods at cheap prices are contributing to Korea's great success. Because the two nations have different priorities, I think Korea's foundation for growth has now become very well established due to the failed response by Japanese firms. Japan is laid back about the economic power paradigm, its FTA negotiations are moving very slowly, and its anti-globalization emotions are driving the vested political interests of the politicians. I am very pessimistic about Japan's response to globalization and optimistic about Korea's response.

Of course, Korea screamed about globalization too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Now, Korea's political cycle seems to be very different from Japan's. Also, Korea's political vested interest in the domestic market, except for real estate, is much smaller and less established than Japan's. Japan needs a more consistent and comprehensive globalization strategy, and it needs a stronger sense of urgency. Korea probably needs a risk averse benchmarking target,

and Japan can no longer be reliable. It needs to stand on its own feet by taking more risks. After all, if there is no investment into original products and others' inventions are just followed, a poor image might be established. Being a small country, Korea also needs an anchoring market,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balance against the instability that can be brought on by globalization

Japan and Korea actually have a good combination of interests which could provide the foundation to establish a new partnership. Deep market integration can be a good rationale, starting from finance standardization, and the mutual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human capital because we are both confronting the issue of aging populations. Because the model has changed, industrial accumulation is very important. From Kyushu to the Ulsan area, the automobile industry cluster is the biggest in the world. If Japan and Korea work together, I think the accumulative effect will prove successful. The two nations will likely have to alter their values regarding productivity-based growth and job creation as both are affected by global competition. So the strategy should be to optimize the commonalities between the two nations and to keep in mind the fact that Japan and Korea are eternal neighbors.

The conclusion of today's talk is rooted in three realities. First, the world is a multi-polarizing world with the emerging markets. Japan and Korea have to adapt to this reality. Second, a new industrial paradigm has emerged. Third, Japan and Korea are moving in a seesaw motion with their markets already quite integrated. Korea outperforms Japan in the first and second realities and this is partially

due to the third reality—the seesaw. Considering these points, Japan-Korea integration should be revised based on their common agendas in areas like finance, the environment, and logistics. The crucial framework to start with is that Japan should realize that it is not a superpower anymore, and Korea needs to understand that regionalism will complement globalism.

Questions & Answers

Q I am the Brazilian ambassador to Korea and am probably only person here from a developing economy. To me, you are all from advanced countries. Dr. Fukagawa, you, made a very comprehensive exposition but you did not mention one aspect of the world economy, agriculture. I am a simple man, not an economist. The term economy comes from the Greek word *ekos* which means house. In the house you have to eat and I do not understand how you can discuss the world economy without eating. You have been talking about competitiveness and advances in technology. What are people going to eat? The population is growing but the food is not. I am not Malthusian, but I am worried about that. Then you talk about protectionism. Japan, Korea, and Asia at large cannot stand for protectionism. They want to sell TVs, computers, and cell phones, but they are very protectionist about agricultural products. They do not want to import food like rice and beef. I think that economics nowadays is a little bit distorted and the theories of capital, labor, and markets are products of the 18th century. This is very old. If you are talking about globalization, you have to consider everything. Tomorrow you will not be able to eat microchips; you will need corn, wheat, and soybeans. I suppose everyone here is from industry, not agriculture. So, what are we talking about? We are forgetting the fundamentals. We have to eat and we have to drink. All the water and food are in the third world. You cannot, sell microchips and not import food because civilization might destroy itself through the process.

A Food is the most basic and probably the last thing that anyone wants to give up. Most Asian countries – including China if you look at it on a per capita basis – are resource poor countries and know the importance of agriculture. At the same time, we are very worried about the future of our food because of that. That is why many Korean and

Japanese firms have invested heavily into Brazil and other agriculturally resource rich countries like some of the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One of the most fashionable recent businesses in Japan is the water business because Japan is worried about the sustainability of water resources. This is also why Japan is investing so much into environmental technologies. I think that Asian countries have room to cooperate with the big emerging markets that have rich natural resources to make our environment more sustainable. I think that Japan is, at least, heading in that direction. Japan is being criticized by European countries for tuna fishing, but recently Japan has found new ways to cultivate tuna to help sustain that resource. Again R&D is really important and can aid in this process. So there is reason to be optimistic about the wisdom of mankind.

Q My question is not directly related to today's topic. Since Prime Minister Hatoyama came to office some anti-American policies have been passed. One reason for this might come from his family history. His grandfather was a Prime Minister as well and served in the Diet at the end of WWII. Around that time his grandfather wrote a column labeling General MacArthur a war criminal. Subsequently, he was banned from participating in politics because of column, and possibly this sparked his anti-American sentiment. My guess is that Prime Minister Hatoyama's background influences his political and economic policies. Would you mind sharing your opinion on this matter?

A Prime Minister Yukio Hatoyama family history is certainly interesting, but he is trying to balance Japan'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s relationship with the rest of the world. Because former Prime Minister Koizumi was strongly committed to the U.S.-Japan alliance, Hatoyama has been consistently rejecting U.S. policies. He has also been promoting the Asian community and shaking hands with neighbors. At the same time, he is an idealist, not a realist. His family translated a very famous book about European integration, and he himself seems very attracted to this type of integration idea. With the economic gloom in Japan, the business community appears to be supporting his Asia-focused attitude. Bureaucrats are probably threatened by their Korean counterparts' attention to FTAs, so they are supporting Hatoyama's ideas as well. The idea of having an East Asian community is a mixture of the interests of the business community, the bureaucrats, and Hatoyama's family.

As for Toyota, I think many Japanese feel that it is being used as a scapegoat for the deteriora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lso, American politicians have been aggressive about playing up the failures of Toyota. It is true that Toyota made a big mistake by responding so slowly. That said, it is also interesting that the irritated U.S. security lobbyists have exacerbated what has been going on with Toyota. The issues involving Toyota and the U.S.-Japan alliance seem to have become synchronized in some sense.

Q Will globalization be easier for some countries and more difficult for others? How about Korea and Japan?

A Yes, because a country like Singapore has an open economy,

the globalization process will be easiest. Singapore has much to gain and little to lose in the process. Korea is also moving in this direction by investing handsomely in English education. This has already proven helpful. On the other hand, the language barrier still exists in Japan. Furthermore, as I discussed in my presentation, Japan's belief that it is the second largest economy is debilitating for its economy. It needs to adapt and follow global trends.

Q You already mentioned that Korea and Japan are already integrated in many respects, but I believe that integration is not that well established between companies. Although I believe that Japanese firms consider Chinese companies a threat, we hear talk on the news about M&As between Japanese and Chinese firms. Would you elaborate on this point? Also, in your opinion, why do you think Korean companies do not acquire Japanese or Chinese companies?

A Especially among the older generation there are negative feelings when Chinese firms try to take over Japanese firms through mergers and acquisitions. Generally though, business transactions with China do not provoke emotional responses like candlelight vigils. People do not pay too much attention to the ownership and controlling managers of a company as long as employment is maintained. So if there is no massive restructuring or a large number of redundancies made, Japanese society does not frown on M&A activities by foreign companies.

The reason why there are not that many cases of M&As with Korean firms is because it belongs to the first generation of indus-

trialization. We have negative feelings about M&A activities. Chinese firms have money, but besides a few cases – like the takeover of IBM personal computers – they have not been very successful so far. In terms of Korea and Japan, frankly speaking, we are very closed societies. Even though Korea might be desperate, and is leading Chinese firms in terms of diversity management, the decision-making process is very inward looking. Also, using non-Korean people and different managerial resources are difficult for both parties.

China is, in some sense, different from Japan and Korea partially because it easily adapted to M&A activities. China has been influenced by the current globalization period. It learned about capitalism in a 21st century context while Japan and Korea learned about capitalism in a 20th or 19th century context. That is why China seems fairly easy going about M&A. Japan and Korea are conservative not only about accepting M&As but also acquiring other companies. I think that the historical background is a crucial difference.

세계화 파고 속의 한국과 일본경제: 도전과 전망*

Yukiko Fukagawa

본인의 오늘 강연 주제는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룩한 경제실적과 그 후유증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본인의 기본적인 결론은, 그 후유증을 해소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조적 특성들로 인해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의 경제실적을 벤치마크(bench-mark)하는 작은 붐(boom)이 일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는 매우 새로운 움직임이다. 실제로 본인은 예전에 한국 언론의 기고를 통해, 일본은 한국이 글로벌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 경제실적에 대해 언젠가 주목하고 배우기 시작할 때가 오리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본인의 강연 내용을 개괄적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인은 감정적,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인해 종종 무시되고 있는 세계화의 세 가지 현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성장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어, 선진시장보다는 신흥시장이 세계성장을 더 많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슈는 세계경제에 이미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성장 및 산업화의 패턴이나 전략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과 한국의 경우 특히 그러한데, 한-일 양국은 아시아 내의 1세대 산업화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의 경제토대는 WTO보다 GATT의 유형에 상당히 많은 근거를 두고 있다. 세 번째는 한-일 FTA 문제이다. 한-일 FTA는 결코 성공적이지 못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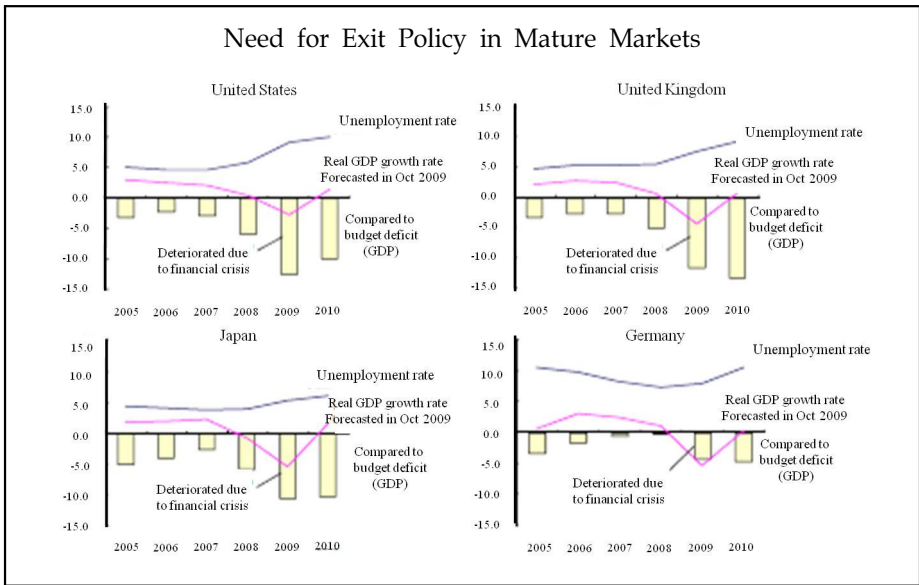
* 이 글은 2010년 4월 8일 개최된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의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혀둔다.

만, 현실적으로 양국의 시장은 많은 측면에서 이미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FTA 협상은 양국 시장이 통합되는 것을 제도화하여 확인만 해주면 된다. Lehman Brothers가 붕괴되기 전과 후를 비교할 때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이 세 가지다. 그리고 세계화의 파고가 한-일 양국에 미친 영향을 언급한 다음, 지역주의와 경쟁체계에 대한 본인의 논리에 근거하여 약간의 함의를 도출한 후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는 아직도 선진국 경제 내에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현재 시장상황에 대한 느낌은 매우 낙관적인 편이다. 이는 많은 나라들이 자국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연착륙으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재정적자가 막대한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또한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연합의 위기도 존재한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들이 앞으로 세계경제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이들 나라의 경제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기초와 국가부문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들은 변동이 심한 유동성이라든지, 신용부족 또는 과잉을 해결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리고 추후 이슈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왜곡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 같은 큰 문제도 있다. 또한 지금은 이번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제조 및 서비스 부문의 실물경제에 의한 조정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여전히 많은 리스크(risk)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보호주의의 부상으로 인한 리스크가 그러하다. 세계경제가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신흥 경제강국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로 의존하게 된다면, 세계경제는 곧 자원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비록 세계는 역사적 변화의 와중에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제하는 시스템은 매우 불확실한 편이다. WTO는 교착상태이며,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

2009년에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15)’도 사실상 실패했다. G-20가 G-7을 대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우리 모두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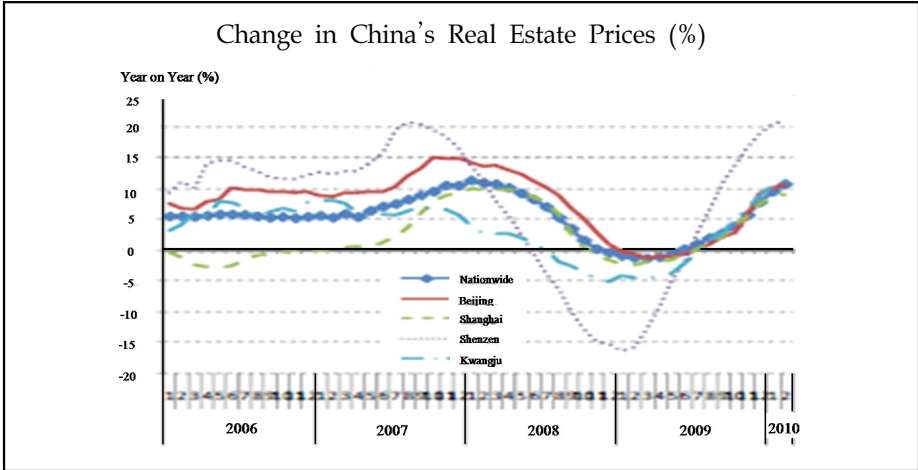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1>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재정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의 2009년도 및 2010년도 재정적자는 GDP의 10%가 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 영국은 더욱 심각하다. 독일의 경우는 훨씬 나은 상황이지만, 모든 선진국 경제가 높은 실업률과 함께 막대한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유일한 나라였으며 아시아는 오랫동안 여기에 재원을 조달해왔다. 그런데 이번 위기가 시작된 이후 미국에서 아태지역으로의 자본흐름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태지역에서 미국으로의 자금흐름은 감소하고 있는 상태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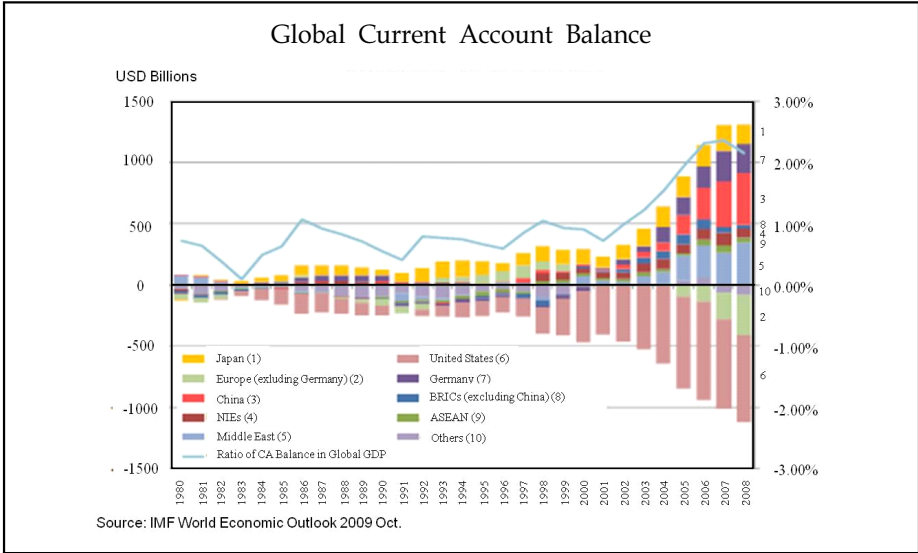


중국은 매우 전략적이었던 반면 일본은 약간 다른 입장을 취했다. 일본이 미국 달러화의 장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 달러화에 역행하는 행동을 실제로 취하지는 못했다. 미국 달러화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여전히 달러화에 투자한다. 상당히 많은 자금이 아태지역, 특히 신흥시장국으로 복귀한 관계로 중국은 자국의 위안화의 안정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너무 많은 과잉유동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래서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시장이 크게 부양되었다. 홍콩과 인접한 셴젠(심천)이 특히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점선 그래프). 더구나 이러한 변동 폭이 세계경제위기 이후에 매우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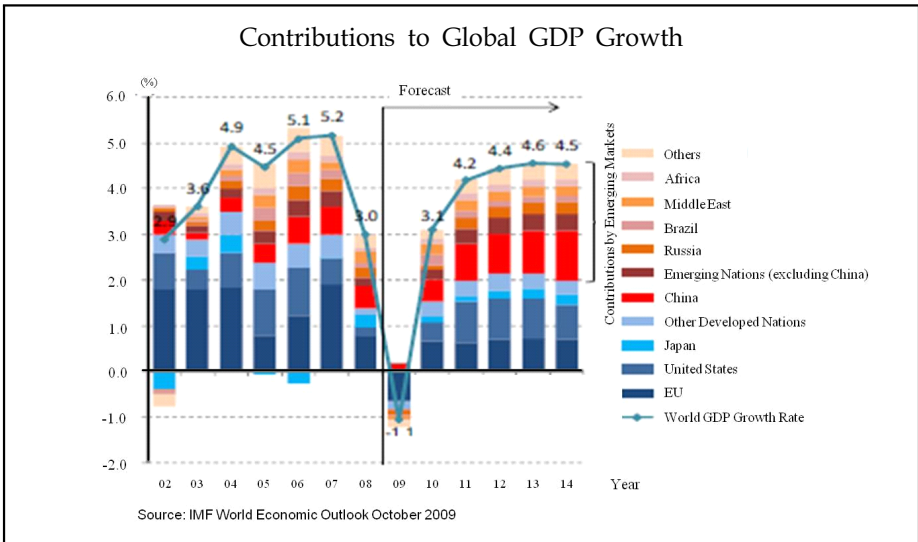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는 세계적 불균형을 바로 잡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여전히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적자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부채에 대한 자원조달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언론이 G-2라는 말을 선호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림 3〉



〈그림 4〉



선진국 경제들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들의 경제성장은 앞으로 브라질이나 러시아, 인도, 중국, 중동지역 국가 등과 같은 신흥시장국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 이전에는 세계경제성장에 대한 신흥시장국들의 기여도가 30%에 불과했다. 지금은 50%를 상회하는데, 비교적 규모가 큰 신흥시장국들이 이러한 기여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그림 4> 참조).

따라서 신흥시장국들의 성장구조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한-일 간의 경제실적을 비교함에 있어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이미 일본인들도 이러한 점을 많이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한국의 4~5개 대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흥시장국들의 환경에 매우 훌륭하게 대처하고 있다.

인구대국인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는 경제구조상 서로 비슷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 우선 이러한 인구대국들은 대량소비 면에서 일본 및 한국과는 크게 다른데, 일본과 한국은 소비행태가 매우 비슷하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화에 있어서 신참 경제국들이다. 그리고 고참 경제국에 비하여 신참 경제국의 시장수요는 극히 다양하다. 신참 경제국들은 인프라(*infrastructure*)와 아주 단순한 소비재들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매우 정교한 서비스 역시 필요로 한다. 그들은 상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하급기술에서부터 하이테크기술 제품에 이르는 모든 것을 필요로 한다. 신참 경제국들이 소득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 역시 과거에 한국 및 일본이 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 그들은 세계시장의 분할과 산업집중으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다.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대학시절에 배웠던 헉셔-오린(*Heckscher-Ohlin*) 모형과 비교우위를 사용하여 국가적 차원의 경제에 대하여 생각하고자 한다는 점을 본인은 종종 느낀다. 지금은 경제들의 실질적 구조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치나 방대한 산업집합체의 성사가 가능

하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들은 국가보다 지역에 더욱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GDP와 같은 수치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신흥시장국들은 확실히 비(非)교과서적이며, 시장세분화가 매우 독특하다. 우선, 신흥시장국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볼 때 이들 국가, 특히 인도와 브라질은 아주 젊다. 급속한 도시화는 세계화의 또 다른 최근 현상이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중국이다. 중국경제의 경우, 각 대도시와 이를 둘러싼 주변경제권에 의해 크게 지배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지방에서 도시로 계속 이주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중 하나는, 중국의 모든 서비스 기능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온 가난한 근로자들이 상품소비에 지출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농촌에서 거주할 때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도시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비교적 정교한 금융서비스의 혜택, 즉 금융대출도 물론 가능하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그들의 수요는 정교한 마케팅과 광고로 자극받게 된다.

디지털화는 또 다른 세계화의 모습이다. 한국은 IT사회로서 그 효과를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흥시장국 소비자들은 기술로부터 폭 넓은 혜택을 보고 있다. 그들의 정보기반은 과거의 TV 대신에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크게 구성된다. 이 소비자들은 유행상품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으며, 그들이 최신 유행의 최첨단 기술 제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심지어 그러한 제품을 구입할 처지가 못 되는 사람들도 추세를 따르려고 애쓴다.

이렇듯 신흥시장국들의 성장구조는 한국과 일본이 발전할 때와 크게 다르다. 신흥시장국들은 많은 새로운 소비자들을 시장에 진입시키

고 있으며, 인프라, 지리, 가족규모, 생활방식에 있어서의 엄청난 다양성으로 인해 이 소비자들은 심지어 단일국가 내에서조차 매우 다양하다. 게다가 소득격차로 인한 계층세분화 역시 존재하는 바, 이는 지난 몇 년 동안보다 대폭 확대되었다. 마케팅에 있어서도, 거대 신흥시장들 내부의 세분화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 정보는 이미 세계화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나 블로그, 또는 트위터(Twitter)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제조업체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신흥시장국들 경제가 과거와는 매우 다르다. 예를 들면, 이 시장들이 크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범위의 경제 역시 아주 중요하다. 이처럼 새로운 소비자들은 매우 따지기 때문에, 가격책정은 신흥시장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결정적 요인이다. IT형의 소비자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반응을 하는 관계로 소비자 만족도는 아주 중요하다.

본인이 이러한 차이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일본 기업들보다 한국 기업들이 이와 같은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잘 맞추기 때문이다. 마케팅이나 브랜드 이미지, 소비자 만족도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훌륭하게 관리하고 있다. 가끔은 이러한 것이, 이른바 “IMF 위기”라고 하는 아픈 경험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얻은 혜택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기업들은 소비자를 만족시키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퇴출되든지 해야만 한다. 한국 기업들은 이처럼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터득하고 있는 반면, 일본 기업들은 그러한 종류의 아픈 경험에 마주한 적이 없다. 일본시장의 규모가 세계 제2위의 위치에 있었던 관계로 일본 기업들은 단순히 내수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그들의 취약점이다. 그리고 신흥시장 내의 시장점유율 확보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약점은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을 따라잡을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좀 더 근본적인 사실인데, 산업화의 모델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교우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일부 국수주의적인 한국 언론들은 대일(對日) 무역적자에 대해 여전히 비판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일종의 국가라는 틀에 매인 사고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하지만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에 국경을 초월하는 산업네트워크가 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 때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동아시아의 성장모델을 특히 각국의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그 모습들이 많이 다르다.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1세대 산업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민족국가와 국가경제를 바탕으로 한다. 이 때문에 각국의 현지 기업가정신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른바 “산업정책”을 통한 정부개입의 비중이 높았다. 기술부문에 있어서는 기량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였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기량을 쌓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을 통해 형성된 산업자본이 필요했다.

2세대 산업화 국가들은 말레이시아와 태국 같은 ASEAN 국가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단순히 자국 기업가들의 활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FDI 유치를 시도했다. 각국 현지 기업인들은, 정치적으로 부여된 기득권과 같은 지역적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화교자본이 대세였던 관계로 2세대 자본은 무역 및 상업부문에 대한 자본이 보다 많았던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였다.

다음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3세대 산업화 국가들을 살펴보자. 이들 국가는 심지어 2세대 국가들과도 매우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계경제가 매우 통합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3세대 모델의 경우에는 FDI의 유출과 유입에 대한 구분이 없다. 우리 시대의 개발도상국들은 통상적으로 자국 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FDI를 유치하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나중에 경쟁력이 충분히 갖춰지면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시장을 다른 나라에 개방하고 해외투자도 했다. 그런데 이 3세대 국가들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 중국 기업들은 M&A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이는 중국이 방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중국경제는 FDI에 크게 의존하여 유지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과거형의 산업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관료들은 “중국은 과거 상당히 많은 FDI를 수용한 결과, 현재 중국경제의 많은 부분이 외국의 다국적 기업에 의존하게 되었어. 이제 중국은 자국 기업을 육성해야만 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1세대 및 2세대 국가들과는 매우 다른 점이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 매우 세계화되고 IT 인프라가 훌륭하게 구축된 관계로, 3세대 국가들은 아주 다른 형태의 경제발전을 따르고 있다. 지금은 금융 부문이 크게 세계화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 1세대 국가들이 해야 했던 것처럼 국내저축을 통해 자국 기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3세대 국가들에게는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3세대의 산업화는 1세대 및 2세대와는 매우 다르다.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들도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과거에 개발도상국들은 X, Y, 그리고 Z를 이루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FDI 및 여타 외부 경영자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변화는 의사결정 속도이다. 세계경제에 있어서 속도는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 관계로, 노동력의 다양화 또한 지극히 중요하다. 리스크는 항상 중요하며 언제나 존재한다. 리스크 관리가 잘못될 경우, 그 여파는 신흥시장국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다. 지금은 세계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민간 관계가 필요하다. 본인이 한-일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기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나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점에서 다시 말하고자 한다. 이는 주로 세계경제가 크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한국 기업들은 1997년의 금융위기를 통해서 이미 깨닫게 되는데 크게 기인한다. 우선 한국형 기업소유구조로 인해 의사결정 속도도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 가령, 삼성의 성공은 이근희 회장의 리더십 때문이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이 “IMF 위기” 와중에 있을 때 사람들은 가족경영이 국가경제를 망친다고 크게 비난했지만, 지금 한국은 그러한 구조의 덕을 보고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일본 기업들은 현재의 국면에서 한동안 따라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중요한 결정들에 대한 책임 역시 중요하다. 일본 기업은 방대한 관료주의적 조직이어서 절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들이 항상 허공에 떠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대응이 그토록 늦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다양성을 수용하는 경영이다. 일본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이른바 “넘버2 신드롬(Number 2 Economy Syndrome)”이다. 일본에 있으면, 일본경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실패했다거나 뒤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느끼지 못한다. 불행히도 일본은 항상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IMF가 일본경제에 결코 개입할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일본을 제외한 세계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 측면에서 일본은 현 상황에 맞도록 다양화를 추구하는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기업들이 이따금 노조 등과 같은 국내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한국 바깥에서 비교적 매우 잘하고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한국 기업 간부들이 일본 기업 간부들보다 영어나 다른 나라 말들을 훨씬 더 잘하는 탓인 부분도 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세계 각지로부터 유능한 국제적 인재들을 스카우트함으로써 세계의

다양성을 수용한 상태이다. 인적자본 면에서 보면 Sony나 Toshiba 같은 일본의 주요 기업들보다 삼성이 훨씬 더 세계화되어 있다.

본인은 한국 정부 내에 과거 스타일의 “주식회사 한국”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행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의 현재 사업방식은 예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다. 원전설비나 고속철을 해외에 판매하자면 정부 간의 거래가 있어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치인을 통한 판매촉진이 매우 중요하며, 한국의 대통령제도 그 자체 또한 혜택을 주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기업경영의 경험이 풍부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국제거래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 역시 일본의 한국 따라잡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상에서 살펴본 것들이 세계경제 속에서 일본이 한국에 뒤쳐지는 주요 요인들이다.

비록 일반적인 기본사항들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경제상황이 매우 다르다. 일본은 세계경제위기가 금융부문보다는 실물부문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중국이 자국의 환율과 자본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관계로, 일본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자본수출국이다. 일본 금융부문이 충격을 받은 것은 Lehman Brothers가 파산하면서 해외자산이 악화된 이후이다. 물론 일본은 온갖 것에 투자를 했다. 국내적으로는, 일본 내 부실채권 문제가 이미 해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다수 일본인들은 일본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이러한 점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는 매우 다른데,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15년”이 Koizumi 총리와 함께 끝났기 때문이다. 일본은 특히 금융부문이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보였다. 그러므로 일본은 유럽이나 미국보다 상황이 훨씬 나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일본 엔화가 평가절상된 것이다. 엔화는 비교적 리스크가 없는 거의 유일한 국제통화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엔화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일본은 실물부문이 고통 받고 있다. 실물부문의 어려움은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기록적으로 감소하면서 급속히 시작되었다. 엔화가치의 상승(그래서 중국 및 한국 기업에게 시장을 잃게 되는)에 대한 일본 선도기업들의 대응은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을 높여, 최첨단 기술집약적 부문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일본 기업 간부들이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은 일본 제품들이 비싸기 때문에 잠재적 시장은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밖에는 없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일본경제가 미국의 거품 소비자들에게 그토록 의존하게 된 것이다. Toyota가 이에 대한 좋은 사례이다. Toyota는 미국 내 자사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했으며, 이러한 것이 시장변화에 능장 대응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국은 심하지 않았으나 일본이 어려움을 크게 겪었던 또 다른 분야는 기계류 같은 중간재였다. 한국의 경우, 최종재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 수입량을 줄여서 재고를 조정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은 최종재를 선진시장에 수출할 뿐만 아니라 중간재 또한 아시아 주요국에 공급하고 있는데, 위기 동안 일본의 이 두 가지 수출품목이 고전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일본은 세계적인 수요위축의 최종 기착지였던 것이다.

또 다른 이슈는 일본의 급격한 소비감소이다.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일본경제는 수출의존도가 한국의 약 1/4 정도로, 내수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방대한 내수시장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일본 기업의 수익성에 압박을 주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또한 고용 면에 있어서도 일본 기업들은, “IMF 위기” 시에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거의 같은 형태의 과감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실직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은퇴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국내소비가 되살아나지 못한 또 다른 이유이다.

최근 일본 정계에는 55년 만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정계변화는 구(舊)소련 붕괴와 대비시켜 볼 수 있다. 과거 자민당(LDP)의 시스템이 상당히 단단하게 자리 잡았었던 관계로, 일본 정부 내의 사결정 과정이 지금까지도 매우 혼란스럽다. 일본은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전히 탐색중이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

본인이 볼 때, 한국은 롤러코스터형 금융위기로부터 겪는 어려움의 거의 막바지에 왔다. 한국의 위기는 한국 내 부동산 투자 팽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통화문제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외국계 은행과 투자자들도 등장했다. 국내 금융자산에 비해 글로벌 자본이 방대했기 때문에, 한국은 자본 유출입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한국의 경우 이번 위기는 실물부문이 아닌 금융부문에서 주로 온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물부문에서 한국의 에너지 효율 면은 여전히 일본보다 나쁘다. 그래서 에너지 및 자원 가격급등은 항상 한국경제에 압박을 주고 있다. 수출하락 면에서도 한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흥시장에 대한 대기업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한국경제는 매우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아마도 한국경제의 어두운 측면은, 대기업들은 잘하고 있지만 소규모 기업들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는 점일 것이다. 10년 전의 대규모 구조조정 덕분에, 고용에 대한 충격은 일본보다 한국이 아주 미미해 보인다. 하지만 한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매우 침체된 상태다. 시장이 한층 유연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1차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용에 대한 충격이 작아 보이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는 한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언제나 필사적이다. 한국경제에 대하여 하향압력을 주기 시작하는 정부부채의 증가, 그리고 고령화 되어 가는 사회 등의 문제에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만큼 이는 특히 그러하다.

세계적 변화 면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중대한 차이가 있다. 한국은 스스로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르도록 노력한 반면에, 일본은 “넘버2 증후군” 사고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FTA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이 결코 없으며, 일본 기업들은 계속 내수시장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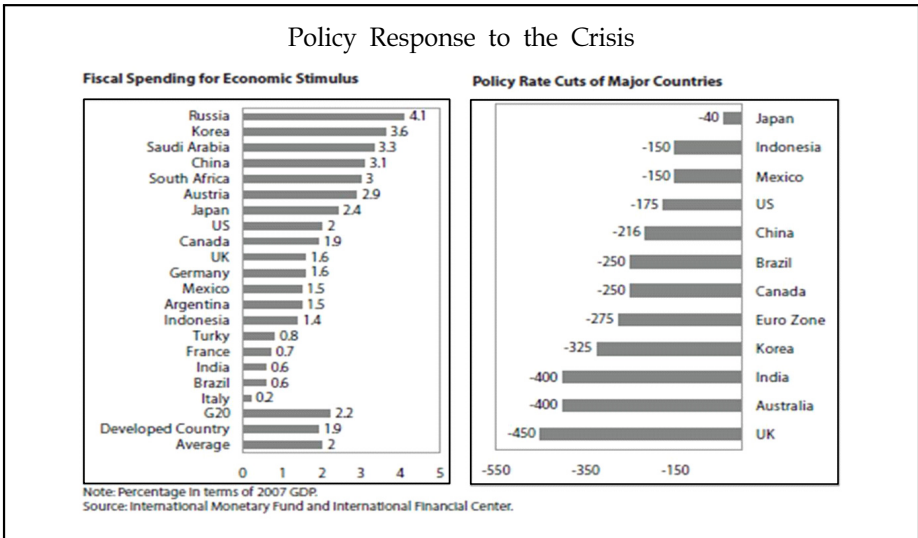
간단히 말해 일본은 세계화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번 위기가 시작된 이후 일본의 엔화의 명목가치가 상승하였고 일본 기업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과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달려들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신흥시장에 대한 한국 제품 수출에 박차를 가했다.

세계금융질서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세계 최대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금융시스템 구조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추종자(follower)이다. 일본은 조용하게 대응하는 식이다. 반면에 한국은 훨씬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오는 11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경제규모가 작고 개방된 나라들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세계 최대 에너지 효율국이자 자원절약 생산국가로서 줄곧 칭찬을 받아왔다. 그러나 때로는 일본 스스로 이러한 면을 비평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좋은 비유가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이다. 김연아는 글로벌 모델을 나타낸다. 김연아는 캐나다에서 훈련을 받아서 새로운 경기규칙에도 잘 적응했다. 그래서 큰 리스크 없이 아사다 마오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 김연아와 달리 아사다 마오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그녀는 러시아 코치에게 훈련을 받았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러시아 스타일은 시대에 뒤쳐진 것이다. 그래서 아사다 마오는 리스크가 매우 크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프인 ‘트리플 악셀’에 집착하고

있다. 아직도 아사다 마오와 그녀의 코치는 운동선수로서 금메달리스트가 되려면 고난도 연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기업이 바로 아사다 마오와 같다. 대다수 경영진들이 엔지니어인 일본의 기술기업들은 경쟁우위에 서기 위해 기술에만 몰두하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에 지나치게 돈을 들여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모델은 김연아와 같다. 한국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돈을 거의 들이지 않는다. 제품에 맞는 큰 시장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시장이 나타나면 뛰어 들어 큰 수익을 낸다. 한국은 중간기술의 시장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이 일본 기업들이 내세우는 전략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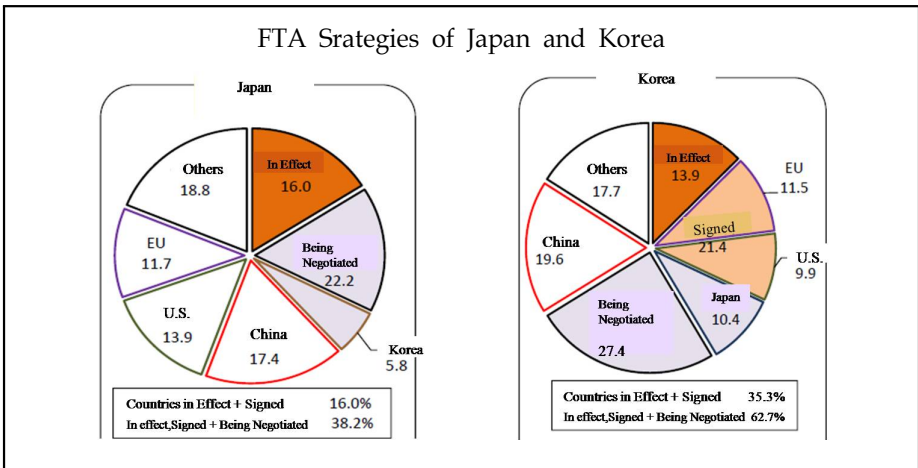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은 대규모 정부지출의 지원이 매우 절대적이었다. <그림 5>는 경기부양 패키지를 위한 재정지출을 나타낸다.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의 총 재정지출은 GDP의 3.6%로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일본은 GDP의 약 2.4%로 훨씬 낮다. 또한 금리인하 면에 있어서도 일본은 이미 제로금리에 가까웠기 때문에 가장 저조하다. 한국은 이번 위기 기간 동안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보다 사정이 한결 나았다.

일본은 아직도 스스로 경제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그림 6>은 비준되었거나 협상 중인 FTA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수출하게 될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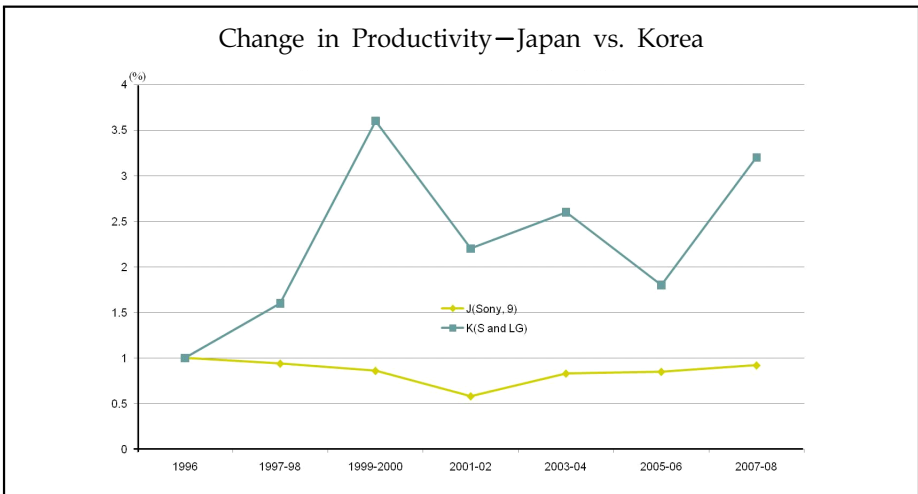


<그림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모든 협정(현재 진행 중인 일본과의 협정을 포함한)이 비준되면 한국 수출의 62.7%가 FTA에 의해 커버될 것이다. 나는 이것이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옳은 방향이라 생각한다. 한편, 일본의 FTA 협상은 매우 더딘 상태인데 일본의 농업 부문 때문이다. 이는 자민당뿐만 아니라 새로 집권한 민주당에도 매우 중대한 이슈가 되어 왔다. 일본은 농업부문의 자유화에 있어서 한국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3세대 산업화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1세대 산업화 모델에 머무르고 있다. 첨단기술이 힘이라는 환상이 일본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보편화되어 있다. 반면에 한국은 대일 무역적자에 대해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아서 무역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한국의 선도기업들은 시장 세분화 및 집중화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반면 일본 기업들에게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없다. 일본은 정부에서부터 선도기업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Baramaki* 문화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장미 뿌리기”로 번역되는 *Baramaki* 는, 정부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공공사업에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일종의 “선심공세”와 유사하다.) 일본에서는 무언가를 세분화하거나 한 가지에 집중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본은 의사결정 속도가 매우 느리고, 결과도 결코 명확하지 않다. 한국 기업들은 신속한 의사결정 덕

〈그림 7〉



을 보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가족경영체제의 덕도 보고 있다.

<그림 7>은 한국과 일본의 생산성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위쪽 선은 한국의 삼성과 LG를, 아래쪽 선은 일본의 Sony와 그 밖의 9개 전자회사들을 나타낸다. <그림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한국은 1996년 이후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해왔다. 한국의 주요 제품과 시장점유율을 나타내는 <표 1>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DRAM, 휴대폰, 자동차, TV 모두에서 2005년 이후부터 세계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다.

〈표 1〉
Global Market Share of Korea's Major Products

(Unit: %)

	2005	2006	2007	2008	2009
DRAM	47.3	44.8	49.0	49.6	61.0
Mobile Phone	19.4	18.1	20.7	24.5	30.6
Automobile	4.3	4.5	4.8	5.1	7.3
Shipbuilding	35.6	35.2	35.6	33.8	34.4
TV	19.6	24.3	28.2	33.7	36.1

Note: 1. Figures for 2009 are estimates by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 For Automobile, figures are market share for U.S. 2009 figures based on January through October

Source: Korea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and the Korea Shipbuilders' Association

마지막으로 본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한-일 양국 시장이 이미 통합되었다는 점을 첨언하고자 한다. 비록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두 나라의 거시경제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일본은 한국의 수출업자들에게 많은 자본과 중간재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이로 인해 한국의 선도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비생산적인 부문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조화로운 사회를 강조하는 풍토와 *Baramaki* 문화 때문에 이를 멈출 수가 없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보다 훨씬 빈약했을 때에는 한국이 일본을 아직 따라잡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일본은 더 이상 우위에 있지 않으며 한국은 강력한 경쟁국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원화가치의 변동에 매우 시달렸다. 모든 나라는 반드시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는 쉬운 과제가 아니다. 고용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은 제조업 대신 서비스 부문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조업 부문은 이미 세계화되었기 때문이다. 서비스 부문은 아직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유일한 분야로, 그럴 경우 관광, 문화, 교육, 금융, 물류와 같은 산업에서 고용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지리적 조건은 아주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은 영원한 이웃인 관계로 양국 간에는 사람의 이동이 자연스럽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여러 면에 있어서 일본보다 잘하고 있다. 우선 한국은 신흥시장에의 접근과 글로벌 모델의 적응 면에서 보다 경쟁력이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은 시소게임 중에 있다. 일본은 신중한 분석 없이 중요한 경영자원을 모두 연구개발 분야에 흠뻑려 놓았다. 이는 리스크가 큰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수익성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며, 마케팅과 같은 여타 부서의 예산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일본은 유능한 인재를 전 세계에, 특히 한국에 공급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산업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들은 특히 한국으

로 많이 유출되었다. 본인은 최근 삼성이 일본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그 반대다. 제품개발이 소비자 중심이다. 또한, 신흥시장국에 대한 집중적 마케팅과 광고로 한국 기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 기업은 때때로 과감하게 대량생산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것이 수익성 증가와 특허 및 인적자원 향상의 결과를 가져왔다.

고품질 중간재를 전문으로 하는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엄청난 성공에 기여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세계화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 반면 세계화는 한국에게는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경제대국 패러다임에 도취되었고, 일본의 FTA 협상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반세계화 감정이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대응 면에서 볼 때, 본인은 일본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

물론, 노무현 정부 때에 한국은 세계화에 대해 크게 불만을 터뜨렸었다. 지금의 한국 정치싸이클은 일본과 크게 달라 보인다. 또한, 한국은 부동산을 제외한 내수시장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본에 비해 훨씬 덜하고 잘 확립되어 있지도 않다. 일본은 보다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세계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긴박감을 더 크게 느껴야 한다. 한국은 아마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벤치마킹 목표가 필요할 터인데, 일본은 더 이상 의지할만한 곳이 못 된다. 일본은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스스로 일어서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독자적인 제품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저 다른 사람의 발명품을 따라하게 되어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다. 또한 한국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화가

가지고 올지도 모르는 불안정에 대한 균형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고정된 시장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실 한-일 양국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할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이해관계의 조합을 가지고 있다. 현재 두 나라 모두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표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심도 있는 시장통합을 만들어 가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성장모델이 변하였기 때문에 산업축적이 매우 중요하다. 큐슈(Kyushu)에서부터 울산까지의 자동차산업 클러스터(cluster)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이 부분에서 한-일 양국이 공조한다면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두 나라는 양쪽 모두 세계적 경쟁의 영향을 받는 만큼, 생산성에 기반을 둔 성장 및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가치관이 아마 바뀌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두 나라의 공통점을 최적화하는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은 영원한 이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강연의 결론은 세 가지 현실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세계는 신흥국들의 부상으로 인해 다극화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은 이러한 현실에 잘 적응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한-일 시장 간에 이미 상당히 이루어진 통합으로 인해 한-일 양국은 시소게임처럼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현실에 대해서 일본보다 성과가 좋았다. 이는 세 번째 현실, 즉 시소게임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한-일 간의 통합은 금융, 환경, 물류와 같은 양국 공동의체에 기초해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시작하기 위한 핵심 토대는 일본 스스로가 더 이상 초강대국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고, 한국은 지역주의가 세계화를 보완해 주게 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질의·응답

질문 나는 주한 브라질 대사로서,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 개발도상국에서 온 유일한 사람인 것 같다. 내 입장으로는 참석한 모든 분들이 선진국 사람들이다. Fukagawa 박사께서 매우 포괄적인 설명을 하였지만 세계경제의 한 부분인 농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보통사람이다. ‘경제’라는 용어는 집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인 ‘ekos’에서 유래되었다. 집에서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먹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 세계경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Fukagawa 박사께서 기술경쟁력과 기술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앞으로 인간들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인구는 증가하나 식량은 한정되어 있다. 내가 맬서스주의자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걱정스럽다. 보호주의에 관한 언급도 있었는데 한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는 대체로 보호주의를 지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들은 TV나 컴퓨터, 휴대폰을 팔기 원하지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매우 보호주의적이며, 쌀과 소고기 같은 식품의 수입을 원하지 않는다. 요즘 경제학이 조금 왜곡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본이나 노동력, 시장 이론은 18세기의 산물로서 아주 고리타분한 것이다. 세계화를 이야기하려면 모든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미래에 여러분이 마이크로칩을 먹을 수는 없을 것이며 옥수수, 밀, 콩이 필요할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농업종사자가 아니라 산업부문 종사자일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고 있다. 우리는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한다. 이러한 음식과 물은 모두 제3세계에 있다. 여러분은 마이크로칩을 팔면서 식품을 수입하지 않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문명이 발전과정에서 스스로를 파괴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답변 식량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아마 아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산업일 것이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중국을 포함하여 식량을 1인당 기준으로 보면)은 자원빈곤국이며 농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동시에,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미래식량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브라질 및 구(舊)소련 일부 국가들

처럼 농업을 위한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물 산업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일본이 환경산업에 그토록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의 환경을 더욱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은 천연 자원이 풍부한 주요 신흥국들과 공조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일본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유럽 국가들이 참치어획과 관련하여 일본을 비판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은 참치를 개량하여 참치자원이 지속되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다. 재차 언급하지만 연구개발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류의 지혜에 대해서 낙관적일 이유가 존재한다.

질문 주제와는 직접적인 관계없는 질문을 하겠다. 하토야마 총리가 집권한 이후로 다소 반미적인 정책들이 통과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하토야마 총리의 가족사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토야마 총리의 조부 역시 총리를 역임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에는 국회의원이었는데, 당시 그의 조부는 맥아더 장군을 전범으로 묘사하는 칼럼을 쓴 바 있다. 결국 그 칼럼으로 인해 그는 정치활동을 못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가 반미감정을 갖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내 추측으로는 이러한 하토야마 총리의 배경이 그의 정치적 및 경제적 정책들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 점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한가?

답변 하토야마 총리의 가족사가 흥미로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토야마 총리는 마일 관계가 일본과 세계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마일 동맹에 매우 몰두했었기 때문에 하토야마 총리는 미국 정책들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그는 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면서 이웃 국가들과 친밀

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동시에 그는 현실주의자가 아닌 이상주의자이다. 그의 가족들은 유럽통합에 관한 매우 유명한 책자를 번역하였으며, 그 역시 이러한 유형의 통합에 매우 끌리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경제침체로 업계는 아시아를 중시하는 하토야마 총리의 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공동체 계획은 업계, 관료계, 그리고 하토야마 가족과의 이해관계가 혼합된 것이다.

Toyota 사태와 관련하여, 대다수 일본인들은 이를 미-일 관계 악화로 인한 희생양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국 정치인들은 Toyota의 실책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왔다. 늦장대응을 한 Toyota가 큰 실수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화가 난 미국의 안보로비스트들이 Toyota 사태의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Toyota 사태와 미-일 동맹 등의 이슈들이 동시에 공명한 것으로 보인다.

질문 세계화가 쉬운 나라는 어느 나라이고, 어려운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가?

답변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는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세계화 과정이 가장 쉬울 것이다. 싱가포르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잃은 것은 거의 없었다. 또한 한국도 영어교육에 훌륭하게 투자를 함으로써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세계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이미 입증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언어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게다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의 믿음이 일본경제를 뒤흔치게 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적 추세에 적응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

질문 한일 양국 시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미 통합되었다고 언급하였는데 기업들 간에는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을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과 일본 기업들 간의 합병 기사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일본이나 중국 기업들을 인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특히 나이가 든 세대들 사이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을 M&A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중국과의 기업매매가 촛불시위와 같은 감정적인 대응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고용이 유지되는 한, 사람들은 누가 기업의 경영권이나 경영진을 지배하는가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해고가 없다면, 일본 사회는 외국 기업들의 M&A 활동에 부정적이지 않다.

한국 기업들과의 M&A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는 한국이 산업화 1세대에 속하기 때문이다. 산업화 1세대는 M&A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 중국 기업들에게 자금은 있지만, IBM 개인용 컴퓨터 인수를 비롯한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M&A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매우 폐쇄적인 사회이다. 비록 한국이 경영다양화에 필사적이고, 중국 기업을 앞지르고 있다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은 매우 내부지향적이다. 또한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나 이질적 경영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이 양쪽 당사자들에게 어려운 부분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은 M&A에 쉽게 적응했기 때문에 일본 및 한국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중국은 작금의 세계화 시대에 영향을 받아왔고 21세기형 자본주의를 배웠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19세기 또는 20세기형 자본주의를 습득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쉽게 M&A를 받아

들이는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은 M&A를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을 인수하자는 것에도 보수적이다. 역사적인 배경이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 같다.

An Overview of China: Economic Prospects and Challenges*

Danny Leipziger

I think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 as I have spent a number of decades examining and benefitting from the experience of Korea – that Korea has been very good for my career at the World Bank. However, I was asked to speak about China today – a topic on everyone’s mind. Let me start by highlighting some basic points.

In the world’s worst economic crisis since the Great Depression, China’s economy still managed to grow 8.7% in 2009. This is in stark contrast to negative growth rat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 the first quarter of 2010 – on an annualized rate – China is growing close to 12%, which I believe creates the danger of overheating as double digit growth is very hard to sustain. At the same time, the composition of growth changed during this crisis due to the very large fiscal stimulus package instituted by the Chinese authorities to make up for the fact that exports were clearly lagging. There was also a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demand in the 2008 to 2009 period. In the last year alone housing prices rose substantially – almost 12% nationwide and 32% in the 36 largest cities. This is obviously why there is concern about a real estate bubble. The exchange rate has –

* Transcript of a speech given at the IGE/Prudential International Finance Lecture on Tuesday, May 18, 2010.

since the end of 2008 – been re-pegged to the dollar. After some appreciation over the previous period, the Chinese authorities obviously felt that in this crisis they did not want the exchange rate to continue to appreciate. This is a controversial topic, and I will come back to it in a moment.

The external picture for China is quite mixed. Although exports dropped precipitously in the second half of 2008 and early 2009 this was quickly reversed. There were very few countries that – other than Korea – have experienced this V-shaped recovery that is written about in text books. At the same time, the trade surplus has dropped from a high of nearly 10% of GDP to 5% in 2009. This is the good news. The bad news for those that are concerned about imbalances is that a 5% of GDP surplus is still quite substantial. This has led to an increase in foreign reserves – known to be roughly \$2.5 trillion at the moment. As exports declined – and then began to recover – there was a shift in composition which saw exports drop from about 40% of GDP earlier in this decade to 27% with a commensurate increase in government investment.

In Figure 1 there is only one line that I find particularly interesting, and that is the calculation of the output gap – the difference between where the economy is performing and what the potential growth rate is. I will come back later to the fact that I am not a great fan of calculations of potential growth rates. This is not because they are done by my former sister institution, the IMF, but because I do not believe all the factors in the potential growth rate calculation are immutable. That is, that they are not subject to policy change. The

interesting point is that in 2009 and 2010, and in the forecast for 2011 as well, China's economy is basically operating at its full potential. There is no output gap according to these calculations. One has to wonder how long an economy can produce that potential growth rate without inflation taking hold. An honest assessment of China's prospects in the next few years has to be rather positive because global exports have recovered, consumption is stable, and this will allow the government to reduce its fiscal stimulus. The stimulus in China has been reported to be close to 6% of GDP, although only

(Figure 1)

China: Main Economic Indicators (percent change, unless otherwise indicated)						
	2006	2007	2008	2009	2010 f	2011 f
The real economy						
Real GDP	11.6	12.9	9.6	8.7	9.5	8.7
Domestic demand 1/	9.7	10.7	9.4	13.8	9.7	8.6
Consumption 1/	8.4	10.1	8.8	9.7	9.6	9.1
Gross capital formation 1/	11.1	11.4	10.2	18.3	9.7	8.2
Contribution to GDP growth (pp)						
Domestic demand 1/	9.4	10.4	8.8	12.7	9.1	8.3
Net exports 1/	2.2	2.6	0.8	-3.9	0.4	0.5
Contribution net exports (WB, pp) 2/	3.8	3.4	1.8	-4.8	0.4	0.5
Exports (goods and services) 2/	23.8	19.9	8.6	-10.6	14.7	9.4
Imports (goods and services) 2/	15.9	14.1	5.1	3.9	16.4	9.2
Potential GDP growth	10.5	10.4	10.1	10.4	9.3	8.7
Output gap (pp)	0.0	2.5	2.1	0.4	0.6	0.6
CPI increases (period average) (%)	1.5	4.8	5.9	-0.8	3.7	2.8
GDP deflator	3.6	7.5	11.4	-2.1	2.7	2.6
External terms of trade	-0.8	-0.9	-4.3	8.6	-2.9	-0.1
Fiscal accounts (percent of GDP)						
Budget balance 3/	-0.8	0.6	-0.4	-2.8	-2.8	...
Revenues	18.3	19.9	19.5	20.6	19.6	...
Expenditures	19.1	19.3	19.9	23.4	22.4	...
External account (US\$ billions)						
Current account balance (US\$ bin)	250	372	426	284	304	341
As share of GDP (%)	9.4	11.0	9.4	5.8	5.5	5.4
Foreign exchange reserves (US\$ bin)	1066	1528	1950	2400	2818	3289
Other						
Broad money growth (M2), e-o-p (%)	16.9	16.7	17.8	27.0	17.0	...

Sources: NBS, PBC, Ministry of Finance, and staff estimates.

1/ WB estimations using data on contribution to growth (Table 2-20 in China Statistical Yearbook).

2/ WB staff estimates based on trade data for goods from the Custom Administration, adjusted for estimated difference in price development for services trade.

3/ For 2009 and 2010 this is the commitment data presented to the N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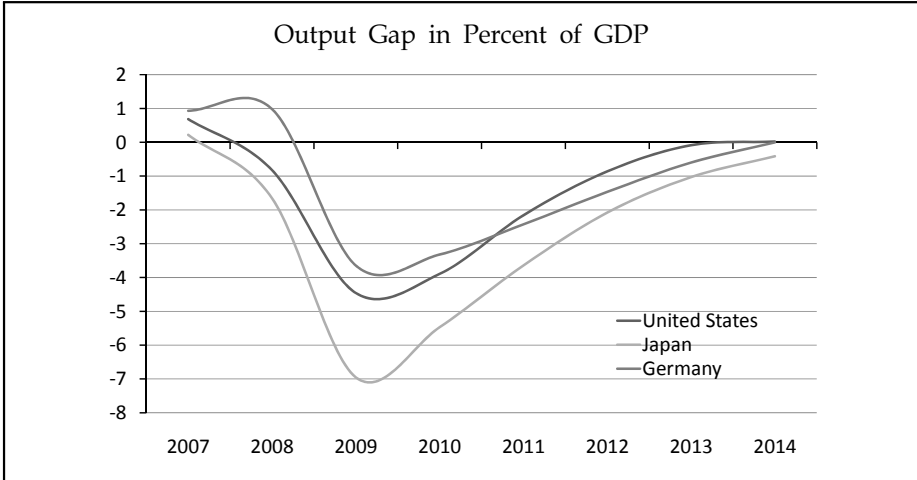
about half of that can be found in the fiscal account. In other words, half of the stimulus package was financed off the balance sheet of the central government through the banking sector.

The labor market is the major preoccupation in China and the reason why the exchange rate has not been allowed to find its natural price. Despite some initial increases in unemployment, the domestic stimulus—which largely substituted government demand in infrastructure for exports—has absorbed a fair amount of the labor.

Let's turn to inflation expectations. If one looks at the double digit growth in early 2010, as well as the appreciation in housing, it is reasonable to begin to worry about inflation—particularly if this were not China. China has some mechanisms to enable it to deal with inflation the way market economies obviously would not. But one would think that under those circumstances tighter monetary policy and exchange rate appreciation would be the right combination of tools to deal with inflationary expectations. I will come back to that later. So as I said, China is operating close to its growth potential while in the United States the economy is operating 5% below its potential.

Figure 2 presents a very dramatic picture of potential growth rates for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For all of the major economies it only gets back to its potential growth rate trend by about 2014. It gets closer in 2012, where it is only 1 to 2 points below potential, but this is in contrast with China which is operating close to its potential and gives some idea as to why people have been

〈Figur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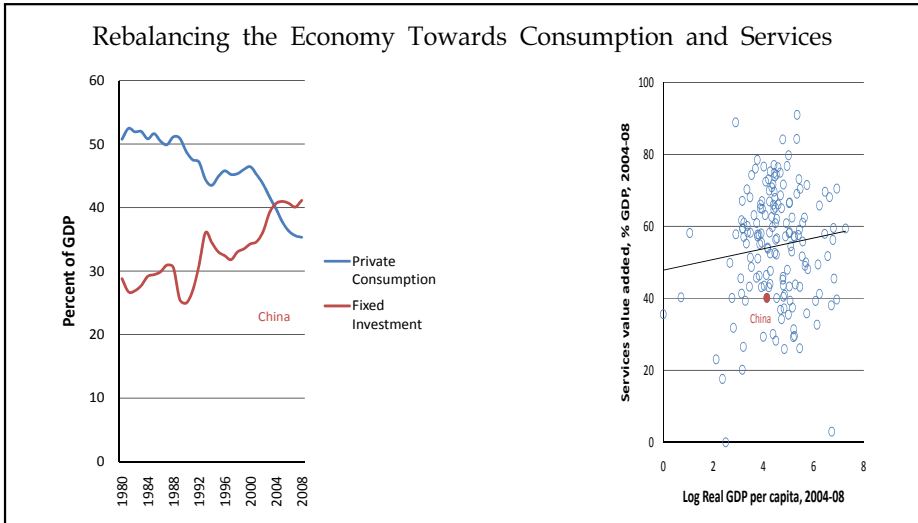


relying on Chinese demand.

The graph on the left in Figure 3 plots what has happened to private consumption and fixed investment over the last 25 years. In general, consumption was coming down prior to the crisis, and fixed investment was increasing. The trend of consumption in the 2008~2010 period is basically flat in China, and exports obviously fell. The piece of aggregate demand that was missing was taken up by government spending. On the right is the percentage of GDP that is accounted for by the service sector compared to the log of GDP. While it is natural that the service sector will grow, China is significantly below trend among the 100 countries represented in Figure 3.

Another imbalance, if it can be put that way, is the location of GDP production. No one says that there should not be growth poles, or centers of growth but—as illustrated geographically by the size of

〈Figure 3〉



the circles in Figure 4— GDP is largely produced by coastal provinces. This is not news to anyone working in China, but it is useful to see a map of the entire country and realize that this is at the heart of a lot of the transition problems that the country has faced. First,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are coming from rural areas to the coast for employment. There are also very large income disparities between urban and rural and between the major growth poles and the poorer parts of the country. This is not an issue for short-term economic management, but it clearly is an issue for longer-term economic management.

Coming into 2010, the government's policy stance has been to keep the economy on as high a growth path as possible—especially after pulling out all the stops in 2009. I already said that on the fiscal side—even though the numbers show a 5.8% fiscal stimulus—the fis-

〈Figure 4〉



cal deficit is about half of that. Nonetheless, there was a tremendous fiscal effort which was matched by very loose credit. A 30% growth in credit in 2009 would make even Alan Greenspan look like a conservative on monetary policy. Although this year China says that credit will rise about 18%, it has also instituted some measures to reign in credit—be it on reserve requirements of banks or curbs on second or even third home ownership. Obviously, China has some means at its disposal that are not in the classic text book of central banks, but some monetary tightening can be expected. At the same time, the fiscal stance will remain stable, and the deficit is still in the manageable range although there are problems report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 China local governments are able to create state enterprises at the local level by either mortgaging land, selling it, or borrowing

from the local bank. This means that local governments were able to live beyond their means. Of course, this is fine when interest rates are low, but it can become a problem when interest rates start to rise. So this is something that is on the horizon. As I said, the current account surplus is now only 5% of GDP, but even 5% is a problem when the world is trying to recover from this deep recession. I think it is the same concern one might have about the Eurozone – forgetting about exchange rates for the moment – where there is a country like Germany which has a large surplus. Even in that grouping, very large surpluses imply large deficits on the parts of others, and if they do not have the fiscal position to sustain it the problem of twin deficits – which characterized the U.S. economy going into this recession – becomes an issue. In the medium term the challenges facing China are to rebalance, with the sources of growth coming increasingly from domestic consumption, without triggering further inflationary expectations. I think it is remarkable that with the growth rates being in the 9% to 10% range there has not been – except in the housing market – widespread inflation. There may be various explanations for this, but I would be surprised if inflationary pressure did not continue.

The second medium-term challenge is spatial inequalities because this affects jobs, migration, congestion, and harmony – one of the stated goals of the 11th Five Year Plan. Looking at Figure 4, it is hard to see a harmonious society with such large inequalities. I think a challenge that China itself has identified based on growth accounting is the ne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ublic investment, particularly now that it has received this large jolt, and the need to see increases in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TFP is much easier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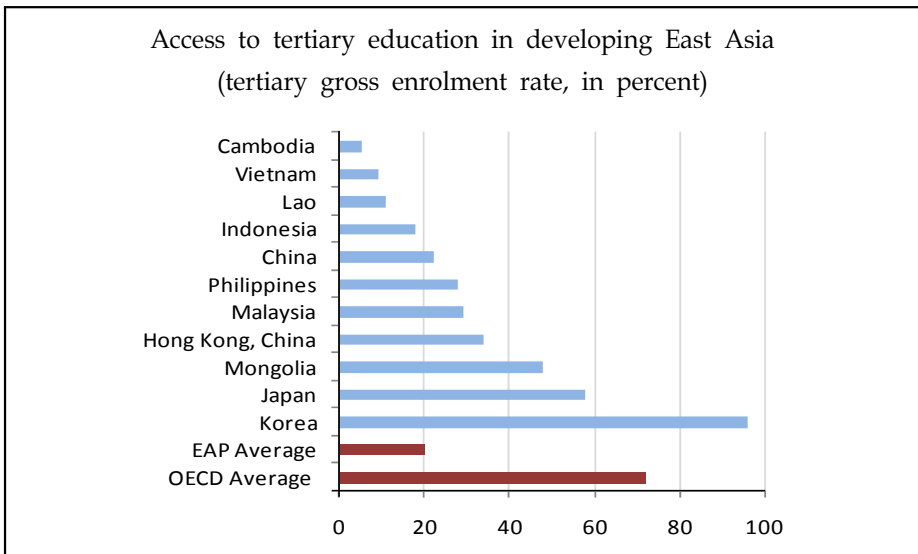
raise in manufacturing than in services, and we see that in Korea. As it makes this transition to a larger service economy – although China is many decades behind Korea – it will also face the problem of lower TFP. There will be issues of economic wealth which will begin to dominate the interest of the population. Obviously, China has the political means to suppress that at the moment but, just as in the OECD countries and elsewhere, there are new concepts about economic welfare. This includes the economics of happiness and a number of other variations on the welfare theme. I do not think the Chinese population will be immune to these pressures, and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will eventually have to review its own role as it inevitably will have to step back from some economic decision making. It will have to create either the institutions or mechanisms to allow markets to work but not allow them to misbehave. So we have learned a lot in this last crisis. If anyone saw the book by Akerlof and Schiller, entitled *Animal Spirit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it recounts hundreds of years of the economic thinking that markets should not be left unattended, but I will leave that for the question and answer session.

Let's take a look at China from a few different angles. Figure 5 shows tertiary education percentages for a number of East Asian countries, with China ranking between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I also like this chart because it shows Korea versus the OECD average. Korea – like in ice skating – outperforms many other countries. We can also look at how countries do in terms of innovation. I am not a huge fan of the use of the number of patents to measure in-

novation, but it is a commonly used measure. The United States, Singapore, Japan, and Korea have much more going on in terms of patents and innovation than does the average nation. This is only interesting when contrasted with countries like China, and some other East Asian nations, that are a bit behind the average in terms of patents and innovation. This helps to explain China's thirst for technology and access to that technology. Someone asked me how Korea should feel about China wanting access to all of Korea's R&D and technology. My off-the-cuff response was that the shoe is now on the other foot, and Korea now understands how Japan felt when Korea was chasing it.

〈Figure 5〉



Let me now turn to the long-term. As I said, China lags far behind in certain aspects of education that are extremely important for the

service economy. High productivity in the service economy is not attainable with such a low level of tertiary education. There are also going to be issues of healthcare. As it turns out, the allocations—public monies that go to hospitals—in China are based on a formula of which the major variable is how many pharmaceuticals that hospital dispenses. That, multiplied by some number, gives the allocation of resources for the hospital. That is not a good way to do health care—unless one happens to be in the pharmaceutical business—and it will eventually start to cost increasingly more. Moreover, the quality of care is not high.

As I said, China lags in the field of innovation although it has been very successful in aspects of industrial policy. One has to be very clear that China's planning has been very good. Go to Shanghai and look at the model of the city where small Legos show what will be built in the next five or ten years. Obviously, China is thinking ahead. Of course, the building of new cities and ports becomes much easier when properly financed, and inconveniences like hurdle rates and the costs of capital do not have to be dealt with. But I think an honest assessment would be that China has been very effective, and presumably it will continue to be so.

Nevertheless, the society is aging, and as the population levels off this will create problems for China and other nations going through the same experience. There were reports in the news in the last few days about how the Japanese are going to deal with the shortage of labor by using robots. The Japanese public feels more comfortable with robots than they do with immigrants, which is an interesting so-

biological observation. Anyway, whether it was the one child policy or just normal economic growth, there is a pyramid that is going to change shape in China. There will be a smaller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needing to support a larger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The pension system is not quite up to standard yet. There are issues of portability. If a person moves from one part of China to another can the pension be taken along? These are big issues. I mentioned climate change as being a longer term challenge. Not because the global pressure is going to get to China—I think China is rather immune to it—but it is realizing on its own that not dealing with climate change issues is going to be more costly in the long term. So it is in its economic interest to deal with it sooner rather than later as eventually the clean-up costs will be higher.

Regarding international factors that affect China, I am in the camp that feels China was given a free pass on the exchange rate, but that free pass seems to be eroding. In the last year we have had world leaders from Europe, the head of the IMF, and many others mentioning to China that its exchange rate is out of line. But—as in most issues of economic policy—I think China will deal with it because it is in its interest. There are good reasons to support the gradual appreciation of the exchange rate. First, inflationary pressure will be abated. Second, domestic consumption will increase. Those are two issues that are in China's national economic interest. Obviously, China does not want the exchange rate to affect exports, but I think China's competitive advantage in some of areas is significant already. Increases in productivity can make up for changes in the exchange

rate. So as I say, this will help consumers to gain and will reduce inflationary pressure. I also happen to be one of those contrarians who is not yet willing to entrust the world economy to one of the new entrants. Let's remember that China's economy is \$4.2 trillion compared to a global GDP of \$60 trillion—with the United States somewhere about \$14 trillion. While China is extremely important because of its impact on global growth, its demand for natural resources, its huge stock of reserves, and a very high carbon-intensive growth path, let's also look at 4 versus 60. The level of reserves will be about \$2.8 trillion by the end of this year, and that is in a country with a per capita income of approximately \$4,000. That is \$2,000 per head—or half a year's earnings—that every Chinese citizen has sitting in the central bank of China. That is a fairly large number. If it were put to referendum, which obviously it would not be, I would expect the Chinese public to prefer to spend some of that money.

What can China learn from The Korean experience? First, China can learn that the exchange rate is only one of the tools of national economic policy. Korea was always conscious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exchange rate, but it never allowed it to be so far out of line that it either caused international difficulties or allowed policy makers to forget other important aspects of economic policy. Second, the transition to a more balanced economy favoring consumption can be successfully navigated, but in my view it requires a strong and safe financial sector. When people ask me how Korea made this transition to encourage more consumption my answer is usually two words: credit cards. I think a brief walk around Myeong-dong is illustrative of how that transition occurred. More seriously, I think if the Chinese

public is to increase consumption beyond the speculation in housing, a prerequisite is to deal with the financial sector so there will not be difficulty in the future. It obviously requires effective regulation because the capital account is not open in China, and the exchange rate is not flexible. So when the capital account is opened, and the exchange rate becomes more flexible, those changes need to be preceded by some regulatory changes. As I have mentioned already, the importance of the service sector highlights the area of education and the knowledge economy. In some parts of the world this is just a catch phrase, but in Korea – apart from renaming the ministry – it has been a very clear agenda item for the government.

For Korea, there are implications as China's economy moves forward. I think that China plays an interesting role as a hugely important market, but also as a strategic competitor. What that means for the way in which companies operate in China differs by sector and corporation. I read a lot about joint ventures in China, and while I do not know if these joint ventures are hugely profitable, it is clear that everyone wants to have a foot hold. I do know that for American companies it is a mixed picture. I think technology is obviously the key determinant of competitiveness. Korea is spending a lot on R&D and it is trying to identify future industries. It is interesting that in the 1980s Korea was largely criticized for the heavy chemical industry experience but, while it was a mixed outcome at the end, without that experience some of the large corporations that are currently experiencing succes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would not exist. Industrial policy does still exist, but fortunately it is not connected to a repressed financial sector. It is not that subsidized credit has dis-

appeared, but there is this very interesting—and in my view productive—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in identifying sectors that may be competitive in the future based on technology. Technology has aspects of a public good which makes it amenable to public policy if done in the right way. I think Korea's three leg policy of exporting to the United States, the Eurozone, and China was obviously sound and successful. At least one of those three markets was functioning fairly well over the last two years which helped Korea's V-shaped recovery.

Recently there have been some editorials—including one by my former boss, the president of the World Bank—about how the world is now a G-2 world. He did not ask me before he wrote that editorial, and I do not think he would have changed his mind, but I happen to think that this is wrong. I think that China is still an emerging economy, and its goals are still quite dissimilar from the OECD countries. Although it is growing faster than others it is not on par, and public demand—once it is allowed—will create policy trade-offs and inconveniences that the current government is spared. The prevalence of market interference—whether in the form of Google and intellectual property or in other areas—makes China a less reliable economic partner. One does not need to look at the Doing Business surveys to discover this. It is obvious. I do not think that global concerns are yet sufficiently high up in the list of priorities for China, but that will change, which brings me to the last thing I would like to cover today—the future pace of globalization.

Recently, one of the final volumes of the Growth Commission—

on which I served along with Han Duk-Soo and a number of other senior policy makers from around the world—was issued. The first report was issued in May of 2008, which was not the best of timing, and the second report was issued in October of 2009, after the crisis. All of the reports looked at the major drivers of growth historically, what do policy makers think of those drivers, and what do policy makers advise. As part of the last round of analysis we had a number of conferences with many of the names regularly seen in the *Financial Times* and elsewhere discussing what globalization might look like in the future. Some of these papers are compiled in this book that Professor Michael Spence and I put out. I think it is fair to say that going forward we expect global growth will be lower and below its potential for a number of years, and this will raise concerns about jobs, distribution, and fairness. In many countries the commitment to the open trading system will be challenged, particularly where domestic unemployment rates are high and where the distribution of income has become rather unequal like the United States — in which the distribution of income has gotten successively worse over the last 15 years, the distribution of wealth is even more skewed, and the average worker has not seen an increase in real income since the early 1990s. This will hav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globalization. Industrial policies, however they are referred to, will become more prevalent in political economies.

As I alluded to before, there was criticism of industrial policy in the 1980s, but there was a reassessment in the 1990s. I, along with Dani Rodrik and a few others, was open-minded to industrial policy if done in a smart way. I now think that the pendulum is swinging

in that direction. There are many European countries looking at aspects of, what we would call, industrial policy. As I said,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industrial policy where credit is controlled and provided at subsidized rates, and saying electric cars may be a good idea and the government – in partnership with business in such a way that business bears the risk – puts money toward R&D that could help solve the technological problems. Then, if electric cars fail, it is a company failure and not a government failure. Nevertheless, industrial policy is not the dirty word that it was a decade or two ago. As I said, the nexus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needs to work. Some countries have been successful, many of them in East Asia, but also in parts of Europe even though it is less well-known. I think Finland has had a very strong industrial policy, and as long as industrial policy revolves around science and technology areas – and is well-constructed – one can make an argument in favor of it. In the end, I think the pendulum has shifted towards the East Asian way of doing things.

My final thoughts will be on Korea's economy, on which I am optimistic. I think that the management of the crisis has been exemplary, both in terms of the stimulus package as well as monetary policy. It was done in text book fashion, and has led to a V-shaped recovery. The monetary quantitative easing that took place can be easily reversed. I think the green growth agenda, quite apart from politics, was a very smart way to package the fiscal stimulus. I think the big issues in fiscal stimulus discussions were on how to spend the money. In the United States there was a big debate whether it should be tax reduction or expenditures. Then, even within ex-

penditures, because of their long lead times, should all of the bridges just be repainted? That is a fiscal stimulus as it creates employment and is probably a good thing, but it does not have a huge rate of return. So the green growth agenda has worked very successfully in Korea. I say this because I am here with 20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BA candidates looking at green technology areas. I think this is a good combination of fiscal stimulus with smart policy going forward, particularly since the green technology is centered on exports. I think in terms of the short-term Korea gets an A, and in the medium-term things are very wisely put together. For the long-term let's return to potential growth rate calculations.

Prior to the crisis, the IMF had done some potential growth rate calculations for Korea, and it showed that over the long-term the growth rate would decline to a rather low number, particularly for East Asian standards. A year or so ago a colleague and I took a look at those calculations¹), and we found that there were three factors that could affect Korea's long-term potential growth rate in a significant way. By significant I mean raising it by two percentage points in the theoretical models if everything was done. The first factor was retirement age. Given demographics, Korea cannot afford to have people retire at 55 if they are going to live until age 80. For 25 years someone else has to pay for them. So this is an issue given the size of the labor force. Seco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has a long way to go in Korea. It is below Japan and way below the OECD

1) Ianchovichina, Elina and Danny Leipziger (2008). How can Korea Raise its Future Potential Growth Rate? *World Economics*. Vol. 9 No. 4. October ~ December 2008.

average. Currently, women are getting into the labor force at junior levels with greater ease, but I do not see that many vice ministers of finance or trade who are women. I think there are obviously social and other issues to be dealt with, but unless Korea wants robots, Korean women would be much better in the labor force. Finally, TFP in the service sector needs to be dealt with. So we made adjustments on these three things. We brought TFP up to the levels close to the TFP that is seen in manufacturing, we brought the female labor participation rate up to Japan's rate, and we changed the retirement age from 55 to 62. With these changes the potential growth rate can be significantly affected.

Finally, Korea has an opportunity to assert itself globally using the G-20 to its advantage. It should not just be a one-off leadership position. There is some debate about whether every country in the G-20 merits membership, but Korea certainly does, and so it has opportunities for leadership. Many still see Korea as a much more reliable partner than China. It may be a much smaller market, but it is a much more predictable and open on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Questions & Answers

Q It was mentioned that China's stimulus was 6% but balance sheets only showed about 3%. Would you please highlight the connection between the two? Also, it was mentioned that in 2009 credit growth in China was 30%. At this time, China was already under the policy of credit tightening. I would like to know how and why the policy of tightening created a 30% expansion of credit. Finally, it was mentioned that the pendulum in industry policy is now swinging back to be more in favor of industrial policy. This is very interesting in light of the fact that Japan was very famous for Japan, Inc., when the entire country was under industrial policy, but currently it is completely out of industrial policy. However, the United States had an industrial policy in the housing sector which turned out to be a debacle. In view of those experiences, how do you view the long term world trend towards globalization?

A Let me answer in reverse order. It is true that support for the housing market could be seen as an interventionist policy which failed. But it depends on how industrial policy is structured. I was careful to put most of my positive comments on the R&D side. I think even if industrial policy is put in a positive light—but many other things are done wrong—it is not going to work. In the housing sector in the United States many things went wrong. Government was encouraging home ownership—which the question defined as industrial policy and is possible—would not have been possible had interest rates not been kept well below what the Taylor rule, or any other objective measure, would have called for. So I guess my answer is that industrial policy can either succeed or fail depending on the complementary policy environment. I think the United States did

a lot of things wrong with monetary and supervision. For its part, Japan is doing a lot of things that are keeping it in a negative growth trap. On the question of credit tightening, I am led to believe that China used other means to try to tighten while at the same time still providing credit. I have the feeling that in 2008 through 2009 China pulled out all the stops. It did the maximum on fiscal and monetary and then tried to tighten up on the housing market but not credit per se. We have to remember that international credit dried up, and Korea also had issues in 2008 with rollovers. Brazil put a lot of money through its state banks when the international markets cramped up. I would distinguish between overall credit availability and trying to tighten up in the housing market. On the fiscal side, I do not know enough to give you the right answer. I am dealing with reports that said only half of the deficit showed up as fiscal. That state banks and others were acting in a way that was the equivalent of fiscal stimulus. I do not have the exact details as to how it was done, but it was obviously done differently than in Europe, and I have the feeling that there were off-balance sheet ways in which fiscal stimulus was provided.

Q What kind of political system might China have in the future? There are different estimates on when China's GDP will exceed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s been a successful model of both economic development and transitioning political systems from a dictatorship to democracy. Many people believed that once GDP per capita exceeded a certain level the people's desire for democracy and freedom would become so strong as to create change in the political system. Will China be able to maintain this one party system or will there be a transition to democracy?

If there is change to a new system, there is bound to be turmoil. How can such turbulence be overcome?

A I am not sure economists are the best to answer that question. That people's demands for a better life and more consumption go up with development is clear. People's interest in democracy is probably not a linear function of economic progress. They are probably quite interested at lower levels of development, but it is just that subsistence and other things dominate their concerns. I think it shows up later just because the fact that other things recede in importance. I am not able to predict what kind of system will emerge, but this preoccupies China as well. There are models which China does not want to follow, such as the Russian model, which creates crony capitalists. There is Vietnam, which is still a one party state, but has opened up its markets much more. When a new class of people that have a lot of wealth is created it is not good for democratic development. So yes, there may be a time when China's economy surpasses the United States. Whether or not it will be a one party state at that time I cannot predict. The difficulty is that it is hard to construct the political system as wanted. The country that was most able to do that was Singapore. Although it was a one party state, it seemed to stress meritocratic features and seemed to make that transition very well—albeit in a small island economy. Doing it in Singapore and doing it in China are totally different stories. So, I do not know the answer to that question.

Q A few years ago some experts on China's economy raised the issue

of non-performing loans (NPLs) in the banking sector in China, which accounted for a big portion of China's GDP. Some say it was as much as 30% of China's GDP. But these days such discussions are seldom raised, and I wonder why. You also did not mention NPLs in the banking sector in China. Did China successfully resolve this issue?

A I remember that when I went to China in the 1990s state-owned enterprise (SOEs) issue and NPLs were the major preoccupations. I am assuming the quality of the supervision has improved. I have not seen a recent number, but I do not think NPLs are anywhere near 30% of GDP today. So it may be that the problem has gotten smaller. The second answer might be that with abundant credit and very low interest rates a lot of things can be hidden. So even if NPLs are 10% it is not discussed when there is ample credit. But, as in any economy, the issue of NPLs may come back if and when the interest rates begin to increase and people cannot repay. My understanding is that the Achilles heel of the SOEs is the local government ownership. The third way is to look at it is that with \$2.5 trillion in reserves bail outs become easier. I think the problem is a lot less than it was a decade ago.

Q It was mentioned that China is not doing enough for the environment, but I have also heard the opposite said. People working on this issue say that China is adamant in refusing any externally imposed rules; however, internally it is very worried about the environment. From the specialist's point of view China is really doing the best it can do. Also, most of the government-sponsored stimulus packages are notoriously ineffective. How do you see the stimulus package? Were there any productive results?

A Well, there were positive results to the extent that it was spent on already planned infrastructure. This is one of the difficulties of unplanned econom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where there is no stock of investments that have been properly vetted that can be accelerated. My impression is that China, because of the planning mechanism, was in a position to accelerate investments which had a decent rate of return. So contrary to the painting bridges and repaving roads—which all countries do to some extent to create employment—I have the feeling that China was much more strategic in how it did it. On climate change, I agree that the China is going to do what it is going to do. Three or four years ago the classic solution to the problem of global externalities of China building one dirty coal-fired power plant per week was to make the Chinese government indifferent to building a \$250 million dirty power plant versus a \$350 million clean power plant. The difficulty is that the economy that is producing unwanted carbon is also running a current account surplus of 8% or 9% of GDP, and accumulating reserves that are unknown in modern times. Thus, it is very hard to say that China should be subsidized. Moreover, China does not want to be dictated to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l that said—and I am not a climate change expert—I do sense that in the past two years China's position on climate change has changed. I think it is beginning to see it as in its interest. It becomes a question of the \$250 million power plant being cheaper today, but the cleanup costs, the reduced life expectancy of the population, and the increased health problems make it a smarter thing to improve now. I think that is the trend.

Q The United States views China's currency as undervalued by 20% to 40%. Of course, China does not admit this. China sees this as a power game between the two nations, and declares that it will not yield to external pressure on this issue. What is the likely compromise between the two nations on this currency issue? When will China relax on this issue, how much will it relax, and in what way?

A Obviously, I do not know. I think the undervaluation point is widely recognized, and there have been a number of interesting editorials that equate the undervalued exchange rate with different a form of protectionism. Some people have even tried to do calculations showing that the undervalued exchange rate is equivalent of a 20% tariff. I think 40% is a bit high, so let's just use 20%. There is no doubt that the exchange rate is out of whack. But the United States is in a very weak position to impose anything these days. I am not personally worried about China dumping its dollar securities as it will lose more than it will gain. But the United States has been pre-occupied and also aided and abetted the imbalance problem. The imbalance has two sides, supply and demand. The fact that China has subsidized the exchange rate was matched by overconsumption in the United States. So there is no moral high ground in that equation. In my talk I suggested that—similar to the climate change issue—China will not necessarily bow to international pressure, but it may bow to its internal cost-benefit analysis. I think as long as it can maintain a relatively competitive export bundle China can afford to see the exchange rate appreciate. It will be a good anti-inflationary tool and it will increase domestic consumption. If a Chinese policy maker was told that the demand curve for exports had a certain elasticity, and the exchange rate could be changed by 10% without much pain being

felt, that would make sense, and it would bring some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China it is a question of making sure that it has sufficient engines of domestic employment as the economy rebalances with greater emphasis on consumption. China can then control employment a bit more at home, rather than having to worry about the export as being the only driver. To the extent that China can improve productivity and the competitiveness of its products beyond the pure cost of labor, I think it can also afford to see the exchange rate move. I do not know when or by how much, but I think in the medium-term the RMB will appreciate. It will be because the China realizes that it is a smart policy.

Q What do you think about China's capital controls in the immediate future?

A I think that is an issue that China will look at in a very pragmatic way. I have views on capital market opening and I think countries should move towards open capital accounts. We have experiences where the regulatory regimes have not been up to speed, so China would need to work on that. The current discussion in the *Financial Times* is in the opposite direction. No one wants to go to capital controls and currency inconvertibility, but there was a lot of discussion when Brazil put a tax on capital imports. I actually wrote a reply to the *Financial Times* in which I opposed it, as I did not think it would be effective in preventing the appreciation of the Brazilian currency, it would raise interest rates domestically, and would send a bad signal for many reasons. I think everyone agrees

that this is correct, and it did not achieve what the Brazilian authorities wanted to achieve. That being said, I also happen to have been on the minority side of the argument when Chile created additional reserve requirements on short-term capital flows. Most Chilean economists, many of whom attended the University of Chicago, were opposed to it. I think it helped Chile in the crises of the 1990s, and there is nothing wrong with governments signaling a preference against short-term hot money. That is a public policy decision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hen the money flows out governments are left with the result. I see nothing wrong with some disincentive for shorter term capital flows. That is just to say that, in the spectrum of laissez faire and control, there is some point in the middle in which it is better to have some control over the types of flows without controlling the capital account the way China does. It is a long answer to the question, but I think China will move towards greater convertibility and greater opening of its capital account. However, if I were advising China I would not go cold turkey. I would discriminate, and I think governments should say that they prefer FDI, with long-term money being a second choice, and with little interest in short-term money. It affects the exchange rate, there is no control over it, and it makes other aspects of economic policy much more difficult. I would draw the line somewhat short of complete openness.

Q There are some criticisms of the G20 summit, the role of the G8, and the G2. People say that the G20 was invented to cope with the financial crisis, but that the G8 will play the main role to cope with some kind of economic system. What is your view on the G20, and the role of China and Korea within the G20?

A I think it is an interesting development that the shift from the focus on the G8 to the G20 happened to coincide with a global crisis which transcended the G8. I prefer the G7, as I have a bit of a problem with the 8th member, but I think the G7/8 are an anachronism. These nations do not control sufficient proportion of world GDP to be the spokesperson for it. The G20 is sort of a convenience. It existed, and it was a convenient alternative. It is not a bad grouping, but there are some odd members of the G20 which would not necessarily be placed there based on economic strength or on the quality of economic policy. It is an imperfect grouping, and the EU has a seat, which I have personally always opposed. It should be the G19. I do not think we will go back to a G8 dominated world, in part because of what happened in Copenhagen. It appeared that President Obama was making deals with members of the G20 but not with members of the G8. I think it means that within the G20, which is not a bad group of overall economic share, there will be different coalitions and different groups which will work on various things. This is an opportunity for Korea – if it can connect to some other players in the G20 – to assert some leadership. Let's look at the Doha round, which is pretty much dead. If Korea could get China, Brazil, and India together to reinforce the international appetite for sticking to global trade rules and openness – whether that means ratifying Doha or not is another story – that would be a coalition of very powerful international trading economies; since the Europeans are somewhat preoccupied with the value of the Euro and fiscal issues, particularly post-Greece, and the United States has been pre-occupied with trade issues because of domestic concerns. A good example is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he reason for non-ratification is

not really about Korea. So who is going to take up the mantle this year in the G20 context for certain issues? I think it will be a subgroup of the G20 depending on the topic. I am not so worried that we are going to return to the status quo.

Q I think the decline in the potential GDP growth in Korea is not caused by a shortage of labor, but by a shortage of domestic investment and private consumption. In this sense, your stance on the importance of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the change in the retirement age does not seem to be consistent with the reality that Korea now faces. Do you have any comment on this?

A The potential growth rate calculations basically come from three factors: capital, labor, and technology. You are focusing on capital. I am focusing on labor and technology. I do not think lack of capital will be the prime problem in Korea – it has very high savings and investment rates. It is an empirical question: how much future growth will come from capital, how much from labor, and how much from technology? I think we would agree that TFP has declined in Korea, and that it is lower in the service sector than it i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So we would agree on the technology aspect. I am focusing on labor because the labor force for 2020, 2030, or 2040 is largely determined by birth rates today. Those birth rates are rather low. I am not saying that it is a problem now, but it will be an issue for the future, and it can be addressed in a variety of ways. For one, the birth rate could be raised. Another relatively simple way is having people work until 62 years of age. Greece, for example, had a retirement age of 55, and in this crisis raised it to 67. Imagine the person

who is 54 and is suddenly told they have to work another 12 years. That is a major shock. At the World Bank I was involved with the Gender Action Plan, where we were trying to get more productivity out of the female labor force. So you are focusing on capital, I am focusing on labor, and in that way our views might be complementary.

중국 경제의 虛와 實: 과제와 전망*

Danny Leipziger

수십 년간 한국의 경험을 검토하고 혜택을 받아온 본인으로서 세계은행에서의 경력을 쌓는데 한국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하지만 오늘은 누구나 관심 있는 주제인 중국의 현황에 대해서 강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몇 가지 중요사항을 부각시키면서 시작하고자 한다.

대공황 이래 세계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중국은 2009년에 8.7%의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이는 세계 다른 국가들의 마이너스 성장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2010년 1/4분기에는 연율로 환산하여 12%로 성장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두 자릿수 성장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과열의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다. 동시에 경제위기 기간 중에 중국의 경제성장 구성비가 변화하였으며, 이는 부진한 수출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재정부문에서 대규모 부양책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수요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주택가격은 전국이 거의 12%, 36개 주요도시는 32%로 엄청나게 상승하였다. 부동산 거품에 대해 우려할만한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말부터 환율은 달러에 다시 고정되어 왔다. 그 이전 몇 분기에 걸쳐 약간의 절상이 있던 후, 중국 당국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지속적 절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낀 것이 분명하다. 이는 매우 논란이 있는 주제인데,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 이 글은 2010년 5월 18일 개최된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의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혀둔다.

중국경제의 외형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초에 중국의 수출은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신속하게 회복되었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교과서에 나오는 V자형 회복을 경험한 국가가 매우 드물다. 동시에 무역흑자도 GDP대비 10% 근접한 높은 수치에서 2009년에는 5%로 하락하였다. 이는 좋은 소식이지만, 불균형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5% 흑자도 여전히 높으며 그리 좋은 소식이 못 된다는 것이다. 무역흑자는 외환보유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2.5조 달러로 알려지고 있다.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대 초 40%에서 정부투자의 증가추세에 따라 27%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1>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차이 즉, output(또는 GDP) 갭의 계산을 표시한 항목이다. 내가 잠재성장률 계산을 특별히 신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나중에 다시 말하겠다. 그 이유는 내가 근무하던 세계은행의 자매기구인 IMF가 산출해내는 것이라서 아니라, 잠재성장률 계산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들이 불변적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 요소들이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2009년이나 2010년, 그리고 2011년의 예측치에서도 중국경제는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상태로 가동된다는 것이다. 이 계산에 의하면 output 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얼마 동안이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생산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아야 한다. 향후 몇 년간의 중국을 솔직하게 평가해보면 긍정적인 수밖에는 없는데 그 이유는 전 세계 수출이 회복되었고, 소비가 안정적이며,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 경기부양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양책 규모는 GDP의 6%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중 절반 정도만 정부재정통계에 잡히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부양책의 절반 정도는 중앙정부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않고 은행부문을 통하여 집행된다는 것이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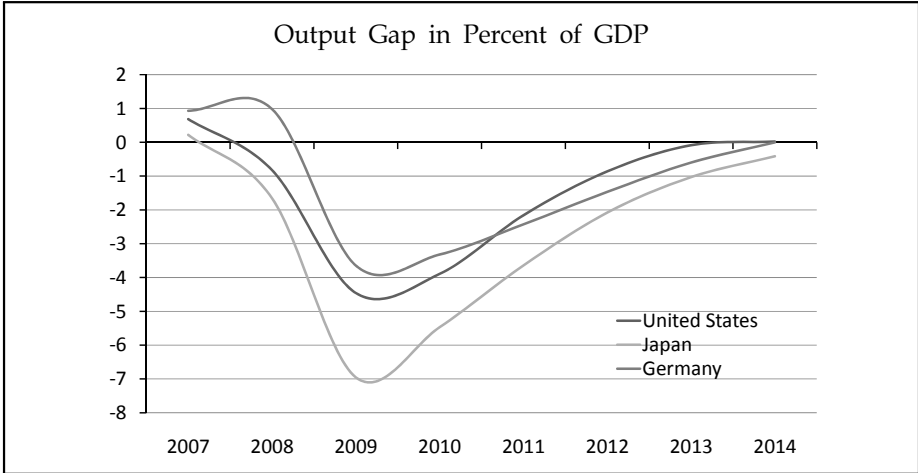
China: Main Economic Indicators (percent change, unless otherwise indicated)						
	2006	2007	2008	2009	2010 f	2011 f
The real economy						
Real GDP	11.6	12.9	9.6	8.7	9.5	8.7
Domestic demand 1/	9.7	10.7	9.4	13.8	9.7	8.6
Consumption 1/	8.4	10.1	8.8	9.7	9.6	9.1
Gross capital formation 1/	11.1	11.4	10.2	18.3	9.7	8.2
Contribution to GDP growth (pp)						
Domestic demand 1/	9.4	10.4	8.8	12.7	9.1	8.3
Net exports 1/	2.2	2.6	0.8	-3.9	0.4	0.5
Contribution net exports (WB, pp) 2/	3.8	3.4	1.8	-4.8	0.4	0.5
Exports (goods and services) 2/	23.8	19.9	8.6	-10.6	14.7	9.4
Imports (goods and services) 2/	15.9	14.1	5.1	3.9	16.4	9.2
Potential GDP growth	10.5	10.4	10.1	10.4	9.3	8.7
Output gap (pp)	0.0	2.5	2.1	0.4	0.6	0.6
CPI increases (period average) (%)	1.5	4.8	5.9	-0.8	3.7	2.8
GDP deflator	3.6	7.5	11.4	-2.1	2.7	2.6
External terms of trade	-0.8	-0.9	-4.3	8.6	-2.9	-0.1
Fiscal accounts (percent of GDP)						
Budget balance 3/	-0.8	0.6	-0.4	-2.8	-2.8	...
Revenues	18.3	19.9	19.5	20.6	19.6	...
Expenditures	19.1	19.3	19.9	23.4	22.4	...
External account (US\$ billions)						
Current account balance (US\$ bln)	250	372	426	284	304	341
As share of GDP (%)	9.4	11.0	9.4	5.8	5.5	5.4
Foreign exchange reserves (US\$ bln)	1066	1528	1950	2400	2818	3289
Other						
Broad money growth (M2), e-o-p (%)	16.9	16.7	17.8	27.0	17.0	...

Sources: NBS, PBC, Ministry of Finance, and staff estimates.
 1/ WB estimations using data on contribution to growth (Table 2-20 in China Statistical Yearbook).
 2/ WB staff estimates based on trade data for goods from the Custom Administration, adjusted for estimated difference in price development for services trade.
 3/ For 2009 and 2010 this is the commitment data presented to the NPC.

노동시장은 중국의 주요 골칫거리이며, 환율을 실세화 시키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위기 초기에 실업이 다소 증가했지만 경기부양조치(주로 수출 감소를 대체하는 정부의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수요)가 상당한 노동력을 흡수하였다.

인플레 기대심리에 대하여 살펴보자. 2010년 초 두 자릿수 성장과 주택가격상승을 보면 인플레가 우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중국이 아니었다라면 더욱 그랬을 것이다. 중국은 시장경제 국가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인플레 대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이러한 상황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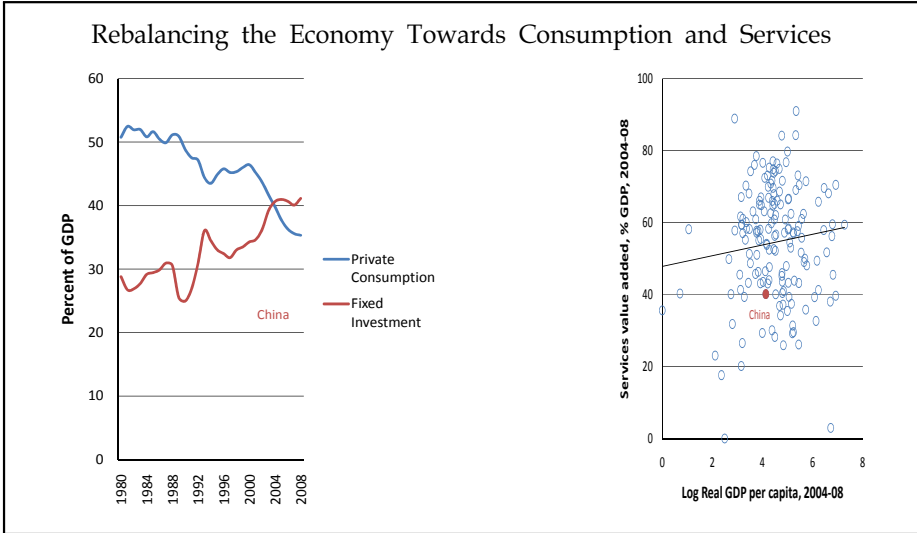


하에서는 통화긴축과 환율절상이 인플레이 기대를 억제하는 정책조합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말하겠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잠재성장보다 5% 낮게 가동되는 동안 중국은 거의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을 해왔다.

<그림 2>는 미국, 일본과 독일의 잠재성장률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모든 주요 경제대국은 2014년이나 잠재성장률로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는 1~2% 포인트 아래로 좀 더 근접하겠지만 잠재성장률에 거의 근접하여 운영되는 중국경제와는 대조를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중국의 수요를 기대해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림 3>의 왼쪽 그래프는 지난 25년간 민간소비와 고정투자의 모습을 나타낸다. 대체로 경제위기 이전에는 소비가 하락하고 고정투자가 증가하였다. 2008년~2010년 중국의 소비추세는 대체로 변동이 없는 반면 수출은 뚜렷하게 하락하였으며, 총수요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그림 3〉



정부지출에 채워지고 있다. 우측은 로그(log)화된 GDP에서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중국의 서비스부문이 당연히 성장하겠지만 100개 국가들 중에 중국은 현저히 추세선 아래에 속하고 있다.

또 하나의 불균형이라고 한다면 국내총생산의 지역적 분포이다. 아무도 성장축이나 성장의 중심지가 없어야 된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림 4>에서 지역별 원의 크기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대부분의 GDP가 연안지역에서 산출되고 있다. 중국관계 종사자들에게는 뉴스거리가 아니겠지만, 이 전국지도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써 중국이 당면한 많은 경제전환 문제의 근원을 알 수 있게 한다. 첫째로, 수억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농촌지역에서 연안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시골과 도시 간, 그리고 주요 성장축과 빈곤지역 간의 소득격차가 심각하다. 이는 단기적 경제운영의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경제정책의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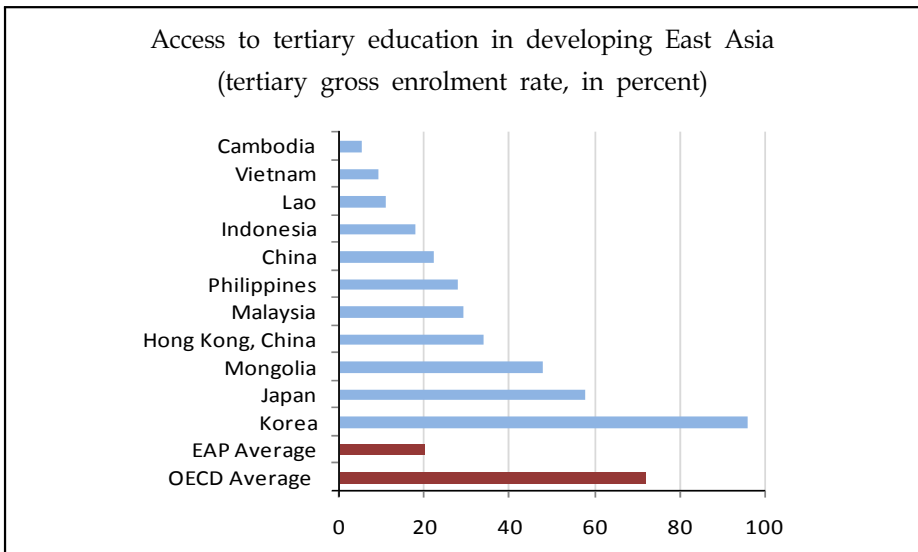
2010년에 들어서면서, 특히 2009년에 중단된 모든 조치들을 끝낸 이후부터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는 가능한 한 높은 성장을 추구하는 쪽으로 운용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측면에서 보면 재정부양 규모의 수치가 비록 5.8%를 나타내고 있지만 재정적자는 이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아무튼 재정측면에서의 엄청난 노력을 금융완화가 뒷받침하고 있다. 2009년에 신용규모가 30% 증가한 것은 통화정책에 있어서 Greenspan조차 보수적으로 보일 정도이다. 중국당국은 금년도 신용팽창이 18% 정도가 될 것이라 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신용증가의 고삐를 조이기 위해 은행의 지급률을 높인다든지 두 주택 또는 세 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교과서적인 수단이 아니더라도, 중국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금융긴축이 예상된다. 동시에 재정기조도 안정적인 것이며, 지방정부의 문제가 보고되고 있으나 정부재정 적자는 통제가능 범위에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토지를 담보 또는 매각하거나 지방은행 차입을 통하여 지방 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적자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금리가 낮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수면에 나타난 상황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5% 밖에 안 된다고 하나, 전 세계가 깊은 불황에서 회복하려는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는 5%도 문제이다. 유로존(Eurozone)에 대해서도 똑같은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율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유럽국가 중에서도 독일처럼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는 나라가 있다. 유로존 내에서도 어떤 국가의 대규모 흑자는 다른 국가들의 적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재정부문에서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쌍둥이적자(미국을 이번 불황에 빠뜨린)는 문제가 된다. 중기적으로 중국의 과제는 균형을 되찾는 것이며, 인플레이 기대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국내소비를 통하여 성장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9~10% 성장을 하면서도 주택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인플레이가 없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앞으로도 인플레이 압력이 계속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중기과제는 지역 간 불평등인데, 이 문제는 일자리, 인구이동, 혼잡 그리고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조화(harmony)는 11차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목표 중의 하나로 되어 있다. <그림 4>에 나타난 것과 같은 대규모의 불평등이 있는 한 조화로운 사회라고 하기는 어렵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경제성장회계에서 도출해낸 과제는 특히 엄청나게 증가하는 공공투자의 효율성 제고인 것으로 생각된다.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것 또한 과제이다. 한국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부문보다는 제조업부문에서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중국이 한국보다 수십 년 뒤져 있지만 앞으로 중국이 대규모 서비스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낮은 총요소생산성의 문제에 부닥치게 될 것이며, 경제적 복지의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 정부가 지금은 그러한 욕구를 억압할 정치적 수단을 가지고 있으나, OECD 국가들이나 여타의 국가에서처럼 경제적 복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행복경제학(economics of happiness)이나 복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개념들이다. 나는 중국인들이 이러한 압력에 면역되어 있다고 보지 않으며, 동시에 중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점검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어느 부문에서의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손을 떼는 것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장이 남용되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나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의 경제위기에서 배운 바가 많다. Akerlof와 Schiller가 쓴 *Animal Spirits*라는 책(프린스턴대 출판부, 2009년 발간)에 의하면, 시장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수백 년간의 경제적 사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기겠다.

〈그림 5〉



중국을 몇 가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다. <그림 5>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등교육 비율을 나타내는데,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나는 이 그림을 좋아하는데 한국과 OECD 국가들의 평균을 비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빙상경기에서처럼 다른 국가들을 앞서 간다. 기술혁신이라는 측면에서도 각국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나는 기술 혁신의 척도로써 특허 건수를 사용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척도이다. 미국, 싱가포르, 일본과 한국이 특허권과 기술혁신의 측면에서 다른 일반적인 국가들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 중국이나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데, 이 방면에서 중국은 평균보다 뒤져있다. 중국이 왜 기술을 갈구 하면서 접근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모든 R&D와 기술에 접근하고 싶어 하는 것에 한국은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내가 받은 적이 있다. 역지사지로, 한국의 추격을 받던 일본의 느낌을 이제는 한국이 이해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즉각적인 대답이었다.

이제는 장기과제를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서비스 경제에 매우 중요한 교육부문에 크게 뒤져있다. 서비스경제의 높은 생산성은 것처럼 낮은 고등교육 수준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의료보건의도 이슈가 되고 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 병원에 지원되는 공적자금은 병원에서 조제하는 약품의 수를 주요변수로 해서 산출되는 공식에 따라 배분되고 있다. 거기에 어떤 수를 곱하여 병원에 배분을 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보건행정에 있어서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며(제약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더욱 증가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게다가 의료의 질이 높지 않다.

이미 언급했듯이, 중국이 산업정책 측면에서 보면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혁신분야에서는 뒤쳐져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계획이 좋았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상해에 가보면 앞으로 5~10년 후에 건설될 시가지의 모습이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다. 분명히 중국은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물론 재원이 제대로 조달되면 신도시나 항만을 건설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이며, 목표수익률이나 자본비용 같은 번거로움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솔직한 평가는 중국이 매우 효과적으로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사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인구증가가 정지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며칠 전 뉴스에 일본인들이 로봇을 사용함으로써 노동력 부족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보도된 적이 있다. 일본 국민들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로봇이 더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는 사회학적 측면에서 볼 때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다. 아무튼 한 자녀 정책 이든 자연스런 경제성장 과정이든 간에 중국의 인구피라미드는 변하고 있다. 작은 비중의 인구가 더 큰 비중의 인구를 부양하게 될 것이다.

연금제도도 표준에 미달하고 있다. 연금의 이동성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중국의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갈 때 연금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중대한 이슈들이다. 앞에서 나는 기후변화가 장기적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중국에 대한 국제적 압력(내가 보기에는 중국이 별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도 않지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스스로 알아서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해나가고 있다. 앞으로 정화비용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미루기보다는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중국에 영향을 주는 국제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환율문제에 있어서 나는 중국에게 프리패스(free pass)가 주어졌다고 느끼는 편이다. 그러나 그 프리패스는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2009년에 유럽의 지도자들이나 IMF 총재, 그리고 많은 인사들이 중국의 환율이 균형을 벗어났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경제정책 이슈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율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점진적인 절상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바람직하다. 첫째로 인플레이 압력이 완화될 것이고, 둘째로 국내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중국경제의 이익에 부합한다. 분명히 중국은 환율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겠지만, 어떤 부문에서는 이미 중국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나는 보고 있다. 생산성의 증가가 환율절상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것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인플레이 압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나는 세계경제를 새로운 참여자(중국)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비주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세계 GDP가 60조 달러지만 중국의 GDP는 4.2조 달러 수준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이는 미국의 14조 달러와도 비교가 된다. 비록 세계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원수요, 막대한 외환보유고, 고탄소 경제구조 등의 측면에서 중국이 매우 중요하지만, 4 대 60(경제규모에서)의 비율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금년 말이 되면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2.8조 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1인당 소득이 4,000달러인 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모든 중국인들이 1인당 2,000달러(1년치 소득의 절반)를 중앙은행에 묻어두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이는 엄청난 수치이다. 만약 이를 국민투표에 부처본다면(그럴 리도 없겠지만), 나는 중국 국민들이 그 돈 중 상당부분을 털어서 쓰는 쪽을 지지하리라 생각한다.

한국의 경험에서 중국이 배울 점은 무엇일까? 첫째로 중국은 환율이 국가경제정책의 많은 수단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배워야 한

다. 한국도 늘 환율의 경쟁력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국제적으로 어려움을 야기하거나 경제정책의 다른 중요한 측면을 망각할 정도로 환율을 정상궤도에서 이탈시키지는 않았다. 둘째로 소비를 선호하는 보다 균형적인 경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이 강화되고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처럼 소비를 촉진시키는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한국이 어떻게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나는 ‘신용카드’라는 한 마디로 대답한다. 명동 주변을 조금만 걸어봐도 변화된 모습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다. 좀 더 진지하게 말해서, 중국의 국민들이 주택투기를 뛰어넘는 소비를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장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부문을 개선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중국의 경우 자본거래가 자유화되어 있지 않고 환율도 변동환율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인 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자본거래가 자유화되고 변동환율제로 전환함에 있어서는 금융규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서비스부문의 중요성은 교육과 지식기반경제를 부각시킨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는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정부 부처의 이름을 다시 작명할 정도로 분명한 정부의 정책과제로 삼아왔다.

중국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많은 의미를 주고 있다. 중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서, 또 전략적 경쟁국으로서 흥미로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것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산업분야나 기업에 따라 다를 것이다. 내가 중국에서의 합작사업에 대하여 많은 것을 읽어 본 바에 의하면, 이익을 많이 냈다는 합작기업의 사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구나 발판을 삼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 기업들의 성과도 반반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내 견해로는 기술이 핵심적인 경쟁력 결정요소이다. 한국은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쓰고 있으며 미래산업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80년대에 한국은 중화학공업 투자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최종적인 성패는

반반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없었더라면 세계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지금의 대기업들이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산업정책이 아직도 존재하나, 다행스럽게도 산업정책이 금융산업을 억압하는 족쇄가 되지는 않고 있다. 신용보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정부와 기업 간에는 미래에 경쟁력 있는 기술기반 산업을 찾아내는 흥미롭고 생산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기술은 공공재의 성격이 있으며, 올바르게 집행된다면 공공정책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 유로지역, 중국을 3대 축으로 하는 한국의 수출정책은 바람직하고 성공적이었다. 지난 2년 동안(2008~2009년) 적어도 3대 시장 중 하나는 잘 유지되어 한국의 V자형 회복에 기여했다.

나의 상관인 세계은행 총재를 포함한 여러 인사들이 세계는 어떻게 양극체제(G-2)가 되었는가에 대한 여러 논문들을 최근에 발표하였다. 세계은행 총재는 그 논문을 쓰기 전에 나에게 물어 본 바 없었고 내가 얘기했어도 듣지 않았겠지만, 그의 견해는 잘못되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나는 중국이 아직 신흥국가이며 경제운용목표도 OECD 국가들과는 여전히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소득수준은 아직 대등한 수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만약 공공수요가 분출되도록 허용되면 지금까지 정부가 부담하지 않았던 많은 정책들의 상쇄효과와 더불어 불편이 현재화될 것이다. 최근의 구글(Google) 사태나 지적재산권 보호, 그 밖에 다른 분야에서처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파트너로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Doing Business의 조사내용을 보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다. 중국의 우선적 고려대상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이제 나의 마지막 주제인 앞으로의 세계화 속도로 넘어가겠다.

한덕수 등 세계 각국의 고위 정책담당자들과 내가 함께 참여한 Growth

Commission의 마지막 보고서가 최근 발간되었다. 2008년 5월에 첫 번째 보고서가 나왔으나 타이밍이 좋지 않았으며, 두 번째 보고서는 금융 위기 이후인 2009년 10월에 발간되었다. 각 보고서들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입안자들이 성장 동력을 어떻게 평가하며, 어떤 권고를 하고 있는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분석 마지막 단계의 일환으로, 앞으로 세계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Financial Times* 등의 저명한 간행물에 단골로 기고하는 인사들과 수차례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몇 개의 논문이 *Michael Spence* 교수와 내가 출판한 이 책에 편철되어 있다. 내 견해로는 볼 때, 앞으로 몇 년간 전 세계의 성장률이 낮아져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것이 일자리, 분배,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킬 것이다. 개방적 무역체제의 약속이 여러 나라들에서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국처럼 국내실업률이 높고 소득분배가 불평등해진 나라에서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미국은 지난 15년간 연속 소득분배가 악화되었고, 부의 분배는 편차가 더 심화되었으며, 일반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1990년 초 이후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이 세계화의 장래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어떻게 평가되든 간에 산업정책은 정치경제학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만연될 것이다.

앞서 시사한 바와 같이, 1980년대에는 산업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나 1990년대에는 새로운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나를 비롯하여 *Dani Rodrik* 등 일부 인사들은 산업정책이 잘만 집행되면 무방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시계추가 그 쪽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산업정책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용이 통제되고 보조적 금리가 적용되는 산업정책과, 전기차와 같은 훌륭한 아이디어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R&D 비용을 정부가 대는 것(리스크는 기업이 감내하는 사업제휴 방식으로)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서 전기차 사

업이 실패하면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지게 된다. 아무튼 지금의 산업정책은 10~20년 전처럼 나쁜 뜻의 용어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정부와 기업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성공사례들이 있다. 그러한 사례 중 대다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며, 잘 알려지지 않는 않았으나 유럽 국가들도 일부 있다. 핀란드가 매우 강력한 산업정책을 채택해왔으며, 산업정책이 과학과 기술영역에 국한되고 잘 짜이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시계추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하는 방식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낙관적으로 보는 한국경제에 대한 견해를 말하겠다. 나는 위기관리가 부양책이나 금융정책의 측면에서 모범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교과서대로 시행되었던 위기관리가 V자형 회복을 이끌어 오고 있다. 도입된 양적 금융완화정책은 쉽게 전환될 수 있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녹색성장정책(**green growth agenda**)은 경기부양책의 훌륭한 방안이었다는 것이 나의 평가이다. 재정적 경기부양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큰 이슈는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한국의 녹색기술 분야를 살펴보기 위해 내가 **George Washington** 대학의 MBA과정 학생 20명을 인솔하여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정책이 재정적 부양책과 미래정책이 잘 결합되었다고 평가하는데, 특히 녹색기술이 수출유망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A 학점을 받았으며, 중기적으로도 매우 현명하게 꾸려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적인 부분은 잠재성장률 계산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경제위기 이전에 IMF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대해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는, 특히 동아시아의 기준을 볼 때, 장기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일 년 전쯤 동료와 함께 그 추

정치를 재검토해 보았더니¹⁾, 세 가지 요소가 한국의 장기적 잠재성장률을 저하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발견하였다. 현저하다(significant)는 것은 모든 조치를 다할 경우 모델에서 2% 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첫 번째 요소는 은퇴연령이다. 인구구조로 본 한국의 평균수명을 80세라고 가정하면, 55세 은퇴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의 비용을 25년 동안 다른 누군가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규모를 볼 때 이는 큰 문제이다. 둘째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아주 미흡하다. 일본보다 낮고 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 지금은 여성들이 손쉬운 하위직에 진출하고 있으며, 아직 재무부나 무역관련 부처의 차관이 여성인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다. 해결해야 할 여타 사회적 이슈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한국이 로봇을 원하지 않는다면 경제활동에서 여성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 끝으로, 서비스산업에서의 총요소생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 재조정을 해보았다. 경제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을 제조업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일본 수준으로 높였으며, 은퇴연령을 55세에서 62세로 변경시켰다. 그 결과 잠재성장률은 훨씬 더 올라갔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G-20을 통하여 세계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일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일회성의 지도적 지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G-20 내의 모든 국가들이 회원국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한국은 분명히 자격이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중국보다는 한국을 더 믿을 만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시장은 훨씬 작지만 예측가능하고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1) Ianchovichina, Elina and Danny Leipziger (2008). How can Korea Raise its Future Potential Growth Rate? *World Economics*. Vol. 9 No. 4. October-December 2008.

질의·응답

질문 중국의 부양정책 규모가 6%이나 대차대조표에서는 약 3%만 나타난다고 언급했는데 이들 두 수치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또한 2009년도에 중국의 여신이 30% 증가했다고 하였으나 당시 중국은 이미 신용긴축 정책을 쓰고 있었다. 금융긴축 기조 하에서 어떻게 30%의 여신확대가 일어날 수 있는가? 끝으로 산업정책이 옛날로 복귀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식회사 일본’으로 유명한 일본도 국가 전체가 산업정책의 틀에서 움직이다가 지금은 산업정책에서 완전히 빠져 나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그러나 미국이 주택 분야에서 산업정책을 사용하였는데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세계화에 대한 장기적 추세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는가?

답변 순서를 바꾸어 답변을 하겠다. 주택시장에 대한 지원이 실패한 개입주의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정책은 어떻게 짜이느냐에 달려있다. 나는 R&D 측면에 대해서만 긍정적 평가를 하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다. 산업정책이 긍정적 목적으로 도입되어도 다른 여러 부문이 잘못되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의 주택부문에서는 여러 가지가 잘못되었다. 미국 정부의 주택소유 장려를 질문자는 산업정책으로 정의하였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Taylor rule이나 여타의 객관적 척도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그토록 오래 지속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미국의 주택정책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산업정책의 성패는 보완적인 정책 환경에 달려있다고 답하겠다. 나는 미국 정부가 통화정책이나 감독 정책에서 실수를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일본도 마이너스 성장의 함정에 빠뜨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금융긴축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은 신용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수단을 통하여 긴축하는 정책을 병행한 것으로 믿고 있다. 2008년과 2009년에 중국이 모든 제동을 풀었다는 느낌을 나는 받았으며, 중국은 재정과 금융정책을 완전

가동하면서도 주택시장에 대해서 고삐를 조이려 했지만 신용공급 자체는 줄이지 않았다. 당시에 국제적 신용이 말라버렸고 2008년에는 한국도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국제금융시장이 경색되자 브라질은 국립은행을 통하여 많은 돈을 풀었다. 나는 전반적인 신용완화와 주택부문의 억제를 구분하고자 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적절한 답변을 할 만큼 알지 못한다. 내가 관여한 보고서에는 재정부양책 규모가 적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것만 언급되었다.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세부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유럽과 다르게 대처했음은 분명하다. 재정수지표에 나타나지 않은 방식으로 재정부양책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이다.

질문 중국의 미래 정치체제는 어떤 형태가 되겠는가?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시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예측이 있다. 경제개발과, 독재국가에서 민주국가로의 이행이라는 면에서 한국은 양쪽 모두 성공하였다. 1인당 GDP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정치체제에 도전할 정도로 강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만큼, 중국이 지금의 일당독재를 유지할 수 있을지 또는 민주체제로 전환될지 여부가 궁금하다.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많은 갈등을 유발할 터인데, 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경제학자로서 그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다. 더 나은 생활과 더 많은 소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높아져 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경제발전과 반드시 1차 함수관계는 아닐 것이다. 저(低)개발단계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해 상당한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생존(subsistence)의 문제나 다른 문제가 더 지배적 관심사이다. 다른 문제들의 중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민주주의가 부각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로서는 어떤 체제가 등장한다고 예측할 수 없으며 이 문제

는 중국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중국이 닳고 싶어 하지 않는 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꽤거리 자본가(crony capitalists)를 양성하는 러시아 모델이다. 베트남은 아직도 일당국가이면서 시장이 더 개방되어 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새로운 계층이 생기는 것은 민주적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경제가 미국경제를 추월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당국가체제 상황에 있을 때인지는 예측할 수 없다. 원하는 바대로 정치체제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다. 가장 잘 해낸 국가가 싱가포르이다. 비록 작은 섬나라 경제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일당체제 국가였던 싱가포르는 실적주의를 강화했고 민주주의로의 전환도 잘 이루어낸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에서 이루어내는 것과 중국에서 이루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르겠다.

질문 몇 년 전에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GDP대비 비율이 높다고 하면서 은행권의 부실채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혹자는 부실채권이 GDP의 30%에 이르고 얘기했다. 그러한 논란이 최근에는 사라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강연에도 중국의 은행부실 채권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이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낸 것인가?

답변 내가 1990년대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국영기업과 부실채권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감독의 질은 개선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최근 수치를 보지는 못했지만 부실채권 규모가 GDP의 30%에 근접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아마도 문제가 작아졌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신용공급이 풍부하고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많은 문제가 숨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비록 부실채권이 10% 수준이라 하더라도 신용이 풍부한 때에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경제에서든지 금리가 상승해서

사람들이 상환할 수 없게 되면 부실채권 문제는 다시 등장하게 된다. 나는 국영기업의 아킬레스건이 지방정부 소유라는 점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2.5조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구제조치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0년 전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훨씬 낮아졌다고 생각된다.

질문 사람들은 중국이 환경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정반대의 얘기도 있다. 환경문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중국이 대외적으로 강제된 규범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환경문제를 매우 우려한다고 한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경기부양책들의 대부분은 비효율적이라고 소문이 나있다. 경기부양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생산적인 성과가 있었나?

답변 경기부양정책은 이미 계획된 인프라 구축에 투자됨에 따라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면밀히 사전에 조사되어 집행만 하면 효과가 가속화할 수 있는 투자거리가 없는 것이 미국과 같이 비(非)계획경제국가의 문제 중 하나이다. 중국은 계획경제 메커니즘 덕택에 양호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는 것이 내 느낌이다. 교량을 도색한다든지 도로를 재포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어느 정도 다 하는 일인데, 이와는 달리 중국은 보다 전략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대하여 중국은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3~4년 전만 해도 매주 하나 꼴로 매연덩어리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였던 중국 정부에게는, 전 세계적인 외부경제효과 문제의 전형적 해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250백만 달러 규모의 매연발전소이든 350백만 달러 규모의 청정발전소이든 차이가 없었다. 곤혹스러운 것은 그렇게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가 GDP의 8%, 9%의 경상적자를 기록하고, 현 시대 미증유의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계속해서 보조를 받아야 한

다고 말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더욱이 중국은 국제사회의 간섭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그랬다는 말이다. 내가 기후변화 전문가가 아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지난 2년간 달라졌음을 느낀다. 중국도 기후변화 대처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시작한 것 같다. 250백만 달러 규모의 발전소가 지금의 계산으로는 경제적이지만 정화비용, 국민의 기대수명 감소, 보건문제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지금 개량된 발전소를 짓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내 생각에 이러한 추세로 가는 것 같다

질문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가 20~40% 저(低)평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은 환율문제를 양국 간의 파워게임으로 보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하여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언제쯤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누그러뜨리겠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완화하겠는가?

답변 분명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저평가 정도는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저평가된 환율을 변형된 보호주의의 형태로 보는 흥미로운 주장들이 많이 나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저평가된 환율이 20% 관세와 맞먹는다는 계산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40%는 약간 높은 수치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20%라고 하자. 환율결정 메커니즘이 고장 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압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입지가 약화되었다. 나의 사건으로는, 중국이 미국 달러화 채권을 덤핑할 경우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불균형문제에 사로잡혀있고 어떻게 보면 불균형을 교사(咬使)했다. 불균형은 공급과 수요의 양면성이 있다. 중국이 환율로 보조해온 것은 미국의 과잉소비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 방정식에서는 도덕적 우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의 기후변화 이슈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국제적 압력에 굴복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부적인 비용편익 분석은 존중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나는 중국이 비교적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군을 유지할 수 있는 한 환율절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환율절상은 훌륭한 인플레이 대책이며, 국내소비를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수출수요곡선이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며 별다른 고통 없이 환율을 10% 절상 가능하다는 말을 만약 중국의 정책입안자가 듣는다면, 그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소비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의 경제구조 재조정함에 있어서, 국내고용을 충분히 유지시켜줄 수 있는 엔진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중국은 수출이 유일한 동력이라는 걱정을 하기보다는 국내부문에서 고용을 약간 늘리는 쪽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인건비 차원을 넘어서서, 중국이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면 환율도 그만큼 절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언제, 얼마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기적으로 환율이 절상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중국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질문 가까운 장래에 중국은 자본거래 통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는가?

답변 그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이 실용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나는 자본시장 개방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즉 모든 국가가 자본계정을 개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규제당국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하였고 중국도 이러한 작업을 해야 한다. 최근 *Financial Times*에서의 토론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본통제나 통화의 불태환성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브라질이 자본유입에 세금을 부과했을 때 논란이 많았다. 실제로 나는 *Financial Times*에 반대하는 답변서를 보냈으며, 세금

이 브라질 통화의 절상을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세금은 국내금리를 상승시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누구나 내 견해에 동조할 것이며 브라질 당국도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건 그렇고, 칠레가 단기자본 유입에 대하여 추가적인 준비금 의무를 도입했을 때도 나는 소수의견 측에 속해 있었다. 대부분의 칠레 경제학자들은 시카고대학 출신으로서 반대의 입장에 섰다. 준비금 의무가 1990년대 칠레 경제위기에 도움이 되었고 단기 투기성 자금에 대한 정부의 거부감을 표현하는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것은 공적인 정책결정이다. 왜냐하면 훗날 돈이 다시 빠져나가면 정부가 결과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단기자금 유입에 대한 모종의 억제조치는 나쁘지 않게 본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방임과 통제의 스펙트럼 사이에서 중국과 같이 자본계정을 완전 통제하지 아니하고 특정 형태의 자본유입에 대해서만 약간 통제하는 방식이 나올 수 있는 중간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길어지고 있지만, 중국은 환율을 변동시키고 자본계정을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만약 나에게 중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라고 한다면 한 번에 해결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구분을 할 것이다. 정부는 FDI를 가장 선호한다고 말해야 하며, 장기자금이 두 번째 선택이고, 단기자금에는 관심이 없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단기자금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가 불가능하며 다른 경제정책수행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나는 완전개방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위치를 선택하겠다.

질문 G-20 정상회의와 G-8, G-2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있다. 사람들은 G-20는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G-8는 경제체제에 대처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 한다. G-20에 대한 견해와, 중국과 한국의 G-20에서의 역할에 대해 말해 달라.

답변 G-8에서 G-20로 초점이 이동한 것과, G-8을 초월하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흥미로운 상황전개라고 생각한다. 나는 G-8의 마지막 멤버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G-7을 선호하지만, G-7이나 G-8 모두가 퇴물이라 생각한다. 이들 나라는 세계경제를 대변할 정도로 세계 GDP에서의 충분한 비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G-20는 일종의 편의의 산물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편리한 대안이었다. 나쁘지 않은 조합이지만 경제력이나 경제정책의 수준면에서 필수멤버가 되지 않아도 될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완벽한 그룹은 아니며, EU가 독자적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늘 반대이다. G-19이 되어야 한다. 코펜하겐에서 벌어진 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G-8이 지배하는 세계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G-8이 아닌 G-20 국가들과 협상을 시도하였다. G-20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G-20 내에서도 각기 다른 연합 및 그룹이 생겨서 여러 가지 이슈에 공동 대처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는 기회가 될 것이며, G-20의 다른 국가들과 연합한다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하라운드를 보면 거의 사망 직전에 있다. 만약 한국이 중국, 브라질, 인도와 손잡고 개방이나 다자간 규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도하라운드의 비준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국제무역사회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은 그리스 사태 이후 유로화의 가치나 재정문제에 골몰해 있고, 미국은 국내문제에 직결된 무역이슈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좋은 사례이다.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진짜 이유는 한국 때문이 아니다. 누가 G-20와 연계하여 이슈를 제기할 수 있을까? 토픽에 따라서 G-20의 하위그룹이 그 역할을 하리라 본다. 나는 현상유지 쪽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질문 한국의 GDP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이유가 노동력 부족보다 국내투자 및 민간소비 부족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나 은퇴연령의 변경 등을 강조한 점은 한국이 당면한 현실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주기 바란다.

답변 잠재성장률 계산은 자본, 노동, 기술의 세 가지를 기본요소로 하고 있는데, 귀하는 자본에 초점을 두고 있고 나는 노동과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고저축-고투자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경험적인 질문은 앞으로의 성장이 자본, 노동, 기술에서 각각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것이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저하되어 왔다는 점과 제조업부문보다는 서비스부문이 낮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기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다. 2020년, 2030년, 그리고 2040년의 노동력이 오늘날의 출산율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노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산율이 다소 낮다. 아직은 문제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그 하나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또 하나 비교적 단순한 방안은 62세까지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의 예를 들자면 55세 은퇴연령을 금번 경제위기 이후 67세로 올렸다. 54세인 사람한테 갑자기 12년을 더 일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라. 엄청난 충격이다. 세계은행에서 나는 Gender Action Plan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여성인력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귀하는 자본에 중점을 둔 반면 나는 노동력에 중점을 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견해는 상호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부 록

《세계경제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1. Occasional Paper Series

00-01	한미관계: 현황 및 향후 전망	Stephen W. Bosworth
00-02	글로벌 뉴 이코노미: 도전과 한국의 활로	양 수 길
00-03	금융감독의 세계적 조류	이 용 근
00-04	성장하는 아시아와 침체 속의 일본	Kenneth S. Courtis
00-05	세계금융체제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Morris Goldstein
00-06	시애틀 이후의 WTO와 한·미 FTA 전망	Jeffrey Schott / 최인범
00-07	다자간 국제경제기구의 미래와 전망	Anne O. Krueger
00-08	남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	Marcus Noland
00-09	Knowledge 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Andrew Fraser
00-10	미국 新행정부 및 의회의 대외·경제 정책방향	C. Fred Bergsten
01-01	2001년 미국, 일본경제와 아시아	Kenneth S. Courtis
01-02	부시행정부의 對韓경제정책과 한국의 대응	Marcus Noland
01-03	3C를 극복하자	Jeffrey D. Jones
01-04	하이테크와 비즈니스, 그리고 세계경제	John Naisbitt
01-05	한국과 IMF	Stanley Fischer
01-06	한국경제의 향후 10년	Dominic Barton
01-07	세계 달러본위제도와 동아시아 환율딜레마	Ronald McKinnon
01-08	新국제질서 속의 유럽과 한국	Pierre Jacquet
02-01	금융위기 再發, 어떻게 막나. 칠레의 경험을 중심으로	Carlos Massad
02-02	세계경제의 기회와 위험	Martin Wolf
02-03	미·일 경제현황과 한국의 대응	Marcus Noland
02-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회복가능성과 위험	Allen Sinai

02-05	세계화: 혜택의 원동력	The Rt. Hon. Patricia Hewitt MP
02-06	9·11 테러사태 이후의 세계질서: 문명의 충돌인가?	Francis Fukuyama
02-07	아시아지역의 통화·금융 협력	Barry Eichengreen
02-08	세계경제, 회복되나?	Kenneth S. Courtis
02-09	미국 경제와 달러의 장래	Marcus Noland
02-10	도하라운드: 문제점과 전망	Jagdish Bhagwati
02-11	2003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전망	Paul F. Gruenwald
02-12	미국경제 현황과 세계경제의 앞날	John B. Taylor
02-13	9·11사태와 미국의 한반도 정책	Thomas C. Hubbard
02-14	미국 경제, 달러 및 대외통상정책 방향	C. Fred Bergsten
02-15	미국의 IT산업 관련 정책과 한국	Peter F. Cowhey
03-01	이라크전 이후의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Allen Sinai
03-02	OECD가 본 한국경제	Donald Johnston
03-03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새 역할	Charles Morrison
03-04	세계경제 전망과 부시행정부의 경기부양책	Phil Gramm
03-05	침체된 독일·유럽 경제가 주는 정책적 교훈과 시	Hans Tietmeyer
03-06	동아시아 금융협력과 한국	Eisuke Sakakibara
04-01	20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전망	Allen Sinai
04-02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Marcus Noland
04-03	미국 대통령선거와 韓·美·日관계	Hugh T. Potrick / Gerald Curtis
04-04	중국경제의 부상과 동북아 지역경제	Dominic Barton
05-01	대통령선거 이후의 미국 통상정책, 어떻게 되나?	Peter F. Cowhey
05-02	아시아 경제·무역환경, 어떻게 전개되나	Dominic Barton
05-03	2기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세계경제 및 시장 전망	Allen Sinai
05-04	일본의 시각에서 본 한국경제의 활로	Fukagawa Yukiko
05-05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보는 한국	Thomas Byrne
05-06	세계 속의 한국경제: 역할과 전망	Anne O. Krueger

05-07	중국과 인도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Wendy Dobson
05-08	동아시아와 아·태지역 경제통합	Robert Scollay
06-01	고유가와 세계경제의 앞날	Philip K. Verleger
06-02	2006년 미국경제/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Allen Sinai
06-03	한-미 FTA : 지속성장의 활로	Alexander Vershbow
06-04	일본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일 FTA	Oshima Shotaro
06-05	일본 경제회생과 한국경제	Fukagawa Yukiko
06-06	세계 M&A시장 현황과 전망 : 우리의 대응	Robert F. Bruner
07-01	한-미관계 : 새로운 동반자 시대를 지향하며	Edwin J. Feulner
07-02	통일 이후 독일 경제침체의 교훈	Juergen B. Donges
07-03	2007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Allen Sinai
07-04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ngel Gurria
07-05	동아시아 FTA 가능한가? : 중국의 시각	Zhang Yunling
07-06	구조적 변화 맞고 있는 세계석유시장과 한국	Fereidun Fesharaki
07-07	변모하는 세계경제와 한국	Anne O. Krueger
07-08	되살아나는 일본경제 : 전망과 과제	Fukagawa Yukiko
07-09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글로벌 기업 전략	Ben Verwaayen
07-10	한-미 FTA : 미국의 시각	Jeffrey Schott
07-11	한-미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Barry Eichengreen
08-01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의 세계화 전략	Anne O. Krueger
08-02	2008년 미국경제와 세계금융시장 동향	Allen Sinai
08-03	유럽의 경제침체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Guy Sorman
08-04	차기 미국 대통령이 풀어야 할 세계적 도전	James A. Baker III
08-05	일본 증권시장의 현재와 전망	Astushi Saito
08-06	대선 이후 미국의 정치·경제, 어떻게 전개되나?	Phil Gramm
08-07	세계 및 아시아 경제·금융 전망	Charles Dallara
08-08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 어떻게 하나?	Guy Sorman
09-01	2009년 한국 경제와 세계 및 아시아 경제 전망	Subir Lall

09-02	혼란과 전환기의 경쟁력 강화: 과제와 전망	Deborah Wince-Smith
09-03	위기 속의 미국 및 세계 경제와 금융: 전망과 정책대응	Allen Sinai
09-04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	Jeffrey Schott
09-05	하강하는 세계경제와 케인지언 정책처방의 실효성	Justin Yifu Lin
10-01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 변화하는 EU: 한국의 기회는?	Jean-Pierre Lehmann
10-02	위기 이후 미국 및 세계경제 전망, 그리고 유산과 정책과제	Allen Sinai

2. 세계경제지평

94-01	유목적 세계의 도전	Jacques Attali
94-02	세계주의와 지역주의 混在	이 영 선
94-03	기회와 위협으로서의 中國	김 완 순
94-04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Paul Kennedy
94-05	화폐의 종말/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홍기택 / 주한광
94-06	UR이후 아·태 경제협력의 과제	유 재 원
94-07	환경과 무역	나성린 / 김승진
94-08	円高에 따른 일본의 산업구조조정과 한국경제의 대응	이 중 윤
94-09	세계경제환경 변화와 우리의 선택	사공 일
94-10	개방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방향	김 중 석
95-01	한국경제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 도전과 기회	사공 일
95-02	기업의 세계화와 경쟁규범	김 완 순
95-03	무엇이 세계화인가	김 병 주
95-04	한국과 미국: 2000년의 세계경제	James Laney
95-05	세계경제는 좌초할 것인가	김 적 교
95-06	엔화강세 지속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박 진 근
95-07	세계화와 한국경제: 호황인가 거품인가	구 본 호
95-08	확산되는 특혜무역협정과 정책과제	남 중 현

95-09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홍 원 탁
95-10	일본산업의 네트워크 구조와 그 효율성	이 종 윤
95-11	국제경쟁력의 갈등	이 재 응
95-12	해방후 우리 경제 반세기의 회고와 전망	김 광 석
96-01	국내 선물시장의 구상과 전망	이 선
96-02	중소기업시대 열릴 것인가	유 동 길
96-03	단체교섭제도有感	배 무 기
96-04	세계화와 기업의 변신	지 청
96-05	우리나라 금융시장개방의 추진방향	박 영 철
96-06	다변주의 對 지역주의, 兩立은 가능한가?	김 세 원
96-07	派生金融商品의 위험과 효용	민 상 기
96-08	최근 경제위기감의 실체와 대응방향	김 광 석
96-09	경제발전, 제도개혁, 경쟁질서의 확립	이 성 섭
96-10	轉機를 맞이한 정부의 기능	김 병 주
96-11	WTO의 새로운 협상의제	김 완 순
97-01	노동법개정 難局의 해법: 교섭창구 단일화를 前提한 複數勞組 허용	김 수 곤
97-02	감속성장, 왜 바람직한가	김 적 교
97-03	韓寶사태의 敎訓	이 재 응
97-04	세계화시대의 경제운영	남 덕 우
97-05	기업성장의 虛實: 韓寶事態에서 얻는 敎訓	지 청
97-06	북한의 식량난과 집단농장체제	문 팔 용
97-07	한국의 금융개혁	윤 계 섭
97-08	高齡化 社會의 도래와 財政危機	박 종 기
97-09	外換危機의 일반모형을 감안한 우리의 대응방향	박 진 근
97-10	벤처기업시대를 열어가려면	유 동 길
98-01	한국의 經濟奇蹟은 끝날 것인가?	남 중 현
98-02	파라다임의 대전환없이는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	송 대 희

98-03	기업구조조정과 바람직한 은행-기업관계	남 상 우
98-04	새로운 기업지배구조의 모색과 사외이사의 역할	이 영 기
98-05	고투자-고저축 고리의 단절을 위한 제언	이 영 탁
99-01	연금개혁의 전망과 과제	박 종 기
99-02	지하철과업과 다시 보는 노조전임자 문제	김 수 곤
99-03	금융구조조정과 중소기업금융	박 준 경
99-04	21세기를 향한 환경정책과제	김 종 기
99-05	소득분배 문제의 실상과 대응방향	김 광 석
00-01	2000년 경제전망 및 향후 과제	김 준 경
00-02	세계금융체제에 관한 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	사공 일
00-03	아시아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미래	사공 일
00-04	高비용 低능률 구조의 부활	이 중 윤
00-05	아시아 경제회복, 지속될 것인가?	사공 일
00-06	국제경제환경과 한국경제	조 윤 제
00-07	기업경영 감시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이 재 응
00-08	미국의 구조조정 경험과 교훈	이 영 세
01-01	한국산업의 경쟁력 위기와 향후 진로	김 도 훈
01-02	주 5일 근무제 도입 신중해야	박 영 범

3. 연구보고서 (세계경제 시리즈)

94-01	UR 이후 아·태경제협력의 과제와 한국의 선택	유 재 원
94-02	환경-무역관계가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	김승진 / 나성린
94-03	円高에 따른 일본의 산업구조조정과 한국경제의 대응	이 중 윤
94-04	개방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방향	김 종 석
95-01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정책대응	주한광 / 김승진
95-02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기업: 한·일 기업의 수영가능성 비교	이 재 규
95-03	WTO 체제와 우리의 대응	김 지 흥

96-01	국내선물시장에 대한 구상과 전망	이 선
96-02	일본산업의 네트워크구조와 그 효율성	이 중 윤
97-01	루마니아의 경제현황과 주요개혁과제	김광석 / 김병주 / 고일동
98-01	우리경제의 成長要因과 成長潛在力 展望	김 광 석
98-02	한국과 ASEAN諸國間 무역구조의 변화추이와 대응방향	김 승 진
98-03	The Global Trading System: Challenges Ahead	
	Wan-Soon Kim / Nakgyoon Choi	
98-04	정보화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대응방안	박 중 국
00-01	Financial Crisis and Industry Policy in Korea	
	Young Sae Lee / Young Seung Jung	
01-01	한국에서의 기술이전과 정보의 역할	이 영 세
01-02	우리나라의 산업·무역정책 전개과정	김 광 석

4. 초청강연자료 (특별강연 시리즈)

94-01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Paul Kennedy
94-02	미국과 일본간의 기술경쟁과 한국에 미친 영향	Ronald Morse
94-03	일본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Toyoo Gyohten
94-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Allen Sinai
94-05	국제환율제도 이대로 좋은가	John Williamson
94-06	The Promises of the WTO for the Trading Community	Arther Dunkel
95-01	멕시코 폐소화 위기와 세계금융시장 동향	Charles Dallara
95-02	세계경제 동향과 미국경제 전망	Allen Sinai
95-03	새로운 게임,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전략	Lester Thurow
95-04	미국-북한관계 전망	Robert Scalapino
95-05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한반도	James Baker III
95-06	미·일 무역마찰과 한국	Anne Krueger
95-07	동북아경제권 개발 전망-일본의 시각	Hisao Kanamori
96-01	Prospects of Global Economy in 1996	Allen Sinai

96-02	유럽연합(EU)의 앞날과 세계경제	Örström Möller
96-03	세계경제와 OECD의 역할	Donald Johnston
96-04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정치적 배경과 영향	Francis Fukuyama
96-05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새 역할	A.W. Clausen
97-01	다국적기업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Wendy Dobson
97-02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정책	William J. Perry
97-03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	Donald K. Hunn
98-01	범 세계적 기업과 다자간 투자협정	Edward M. Graham
98-02	변화속의 안정: 새로운 한·미 관계의 모색	W. Anthony Lake
98-03	한국: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중심으로	Donald P. Gregg
98-04	경제적 측면에서 본 독일 통일의 교훈	Juergen B. Donges
98-05	세계화와 종족화-20세기 말의 딜레마	Guy Sorman
99-01	북한의 정치·경제상황과 동북아 안보	Marcus Noland
99-02	엔-달러 환율과 국제금융시장	Kenneth S. Courtis
99-03	한국과 아시아 경제: 전망과 정책대응	Donald Johnston / Hubert Neiss
99-04	미국과 일본 경제의 비교 평가	Hugh T. Patrick
99-05	세계경제: 도전과 전망	Rudiger Dornbusch
00-01	금융세계화, 어떻게 대처하나	James P. Rooney
00-02	2000년 국제금융 및 신흥시장 전망	Charles Dallara / Robert Hormats

5. 전문가 진단

- 한국 FTA 정책의 虛와 實 남종현
- A Foreign Businessman's Observations on the Korean Economy & Other Things William Oberlin
- 세계속의 한국경제 : 과제와 전망 사공 일 編

6. 기타 보고서

- The Global Economy and Korea 사공 일 編
- The Multilateral Trading and Financial System 사공 일 編
- Major Issues for the Global Trade and Financial System 사공 일 編
- 탈냉전시대 韓美 정치·경제협력관계 사공 일 / C. Fred Bergsten 編
- 새로운 韓美 협력체제의 모색 사공 일 / C. Fred Bergsten 編
- 세계화시대의 英美관계 사공 일 / C. Fred Bergsten 編
- 한반도 통일 및 韓美 관계의 현황과 과제 사공 일 編
-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un(I) 세계경제연구원 編
-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un(II) 세계경제연구원 編
-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un(III) 세계경제연구원 編
-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un(IV) 세계경제연구원 編
- 세계반도체산업의 발전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계경제연구원 編
- 한국의 금융개혁 세계경제연구원 編
- Policy Priorities for the Unified Korean Economy 사공 일 / 김광석 編
- The Fifty Year of the GATT/WTO: Past Performance and Future Challenges 사공 일 / 김광석 編
-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 사공 일 / 구영훈 編
- 아시아 금융위기와 한·미관계 세계경제연구원 編
- For Better Tomorrow: Asia-Europe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ASEM Vision Group
- 제6차 한·미 21세기 위원회 보고서 세계경제연구원 編
- 동북아시아포럼 2000 세계경제연구원 編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 사공 일 / 왕윤중
- 세계 자유무역 의제를 위한 여건조성 세계경제연구원 編
- Rebuild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PG서울보고서) Emerging Markets Encinent Persons Group 編

-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I) 세계경제연구원 編
- 새로운 세계질서: 기회와 도전 -
-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II) 세계경제연구원 編
- 세계경제 및 주요국 경제의 앞날 -
-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III) 세계경제연구원 編
- 한국 경제의 진로 -
- 세계경제연구원 개원 10주년 국제회의 세계경제연구원 編
- 세계환율체제 개편과 동아시아 경제 John Williamson
- 아시아 화폐단일화, 가능한가? Robert Mundell
- 창업활성화, 어떻게 하나 세계경제연구원 編
- 세계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Berry Eichengreen
- 미국의 힘은 얼마나 강하며, 중국의 부상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Paul Kennedy / Bernard K. Gordon
- 2006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Richard N. Cooper / George Scalise
- 아시아 경제통합과 세계 속의 한국경제 Eisuke Sakakibara / Charles Dallara
- 2007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Guy Sorman / Tarun Das
- Globalization and Korean Financial Sector (세계화 시대의 한국 금융산업) 세계경제연구원 編
- 2007 IGE/Prudential International Finance Lecture David Hale / Jerald Schiff
- 2008 IGE/Prudential International Finance Lecture Robert C. Pozen / Jeffrey R. Shafer
- Lessons from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Its Implications for the World and Korea 세계경제연구원 編

• 2009 IGE/Prudential International Finance Lecture

Danny Leipziger / Anne O. Krueger

• 2009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Guy Sorman / Jeffrey J. Schott

• G-20 Reform Initiative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Financial Regulation

세계경제연구원 編

• 2010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Yukiko Fukagawa / Danny Leipziger

**2010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2010년 7월 26일 인쇄

2010년 7월 30일 발행

발행인 남종현

발행 세계경제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인쇄 오름시스템(주) 2273-7011

ISBN 978-89-86828-65-8

정가 10,000원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 개인회원
- 법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 연구원 주최 행사에 우선 초청
 - 연구원 주최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 무료 제공
 - 법인 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개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 연구원 주최 행사에 초청
 - 행사 참가비 할인
 - 연구원이 발간하는 일부 간행물 무료 제공
- 후원회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회원 가입 문의
 -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세계경제연구원
 - 연락처: 551-3334~7(전화) 551-3339(팩스)
 - E-mail: igenet@igenet.com
 - <http://www.igenet.com>

볼 수 없던

세상이 보인다

잡을 수 없던

아름다움이 잡힌다

이뤄질 수 없던

일이 이루어진다

세상에 없던
스마트한 능력이 생겼다
GALAXY S



세상이 만만해진다

SUPER SMART



SUPER DESIGN

9.9mm에 아름답게 다 갖춘
슈퍼 디자인



SUPER AMOLED

아몰레드보다 더 밝고
선명한 4.0형 슈퍼 아몰레드



SUPER APP

깊이가 다른 S만의 생활친화형
슈퍼 애플리케이션

www.samsungmobile.com

IGE 세계경제연구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TEL : 02) 551-3334/7, FAX : 02) 551-3339
E-mail : igenet@igenet.com
(Website) <http://www.igenet.com>



ISBN 978-89-86828-63-4

정가 10,000원